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 21 / Sep. 2018

09

재정 인사이드

기획특집

청년 일자리 정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칼럼

국가투자 프로젝트의 방향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향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

툇아보기

혁신성장 관련 정부예산 현황

재정과 정보

이슈포커스

EC의 「Ageing Report」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더 쉽고 편리해진 e나라도움이 찾아갑니다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변화

Photo Essay
포토에세이



시대를 읽는 눈으로 변화에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무더위가 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계절이 변하자 사람들의 옷차림과 생활용품이 바뀌고

자주 가는 여가 활동지도 달라졌습니다.

때가 되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삶의 패턴과

재정흐름도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시대를 읽는 눈으로

변화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PTEMBER
2018 Vol. 21

재정 인사이트

06 기획특집

청년 일자리 정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12 재정칼럼: 혁신성장

국가투자 프로젝트의 방향
김재훈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향
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1 톨아보기

혁신성장 관련 정부예산 현황

재정과 정보

26 이슈포커스

유럽위원회(EC)의 「Ageing Report」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더 쉽고 편리해진 e나라도움이 찾아갑니다

40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월간 재정통계
테마통계: 사회복지 분야

52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폭염

56 해외재정동향

재정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주요국의 재정보고서 작성 사례: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62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⑨

고대 중국의 시장과 국가의 긴장관계

66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재정 인사이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재정 이야기
다양한 재정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이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합니다



기획특집

청년 일자리 정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재정칼럼: 혁신성장

국가투자 프로젝트의 방향

김재훈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향

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툼아보기

혁신성장 관련 정부예산 현황

청년 일자리 정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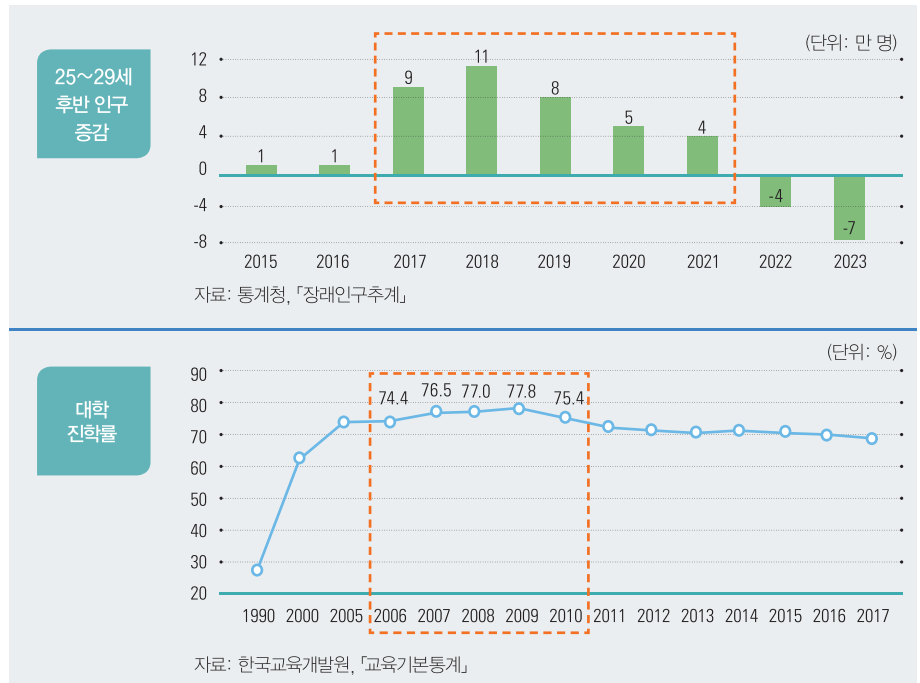
buheek@gmail.com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청년 일자리 대책

2003년 이후 총 26번의 대책 발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난 십여 년 간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직면한 과제였으며,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많은 대책 발표에도 청년고용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재탕·삼탕에 불과한 대책들이 계속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3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시 한 번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도 말한 것처럼 지금의 청년고용상황은 재난수준으로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 우리 경제의 큰 축이던 자동차·조선업 부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속에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에코세대)인 20대 후반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향후 3~4년간은 청년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20대 후반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매우 활발한 시기여서 그만큼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데,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았던 2000년대 후반에 대학을 입학했던 청년들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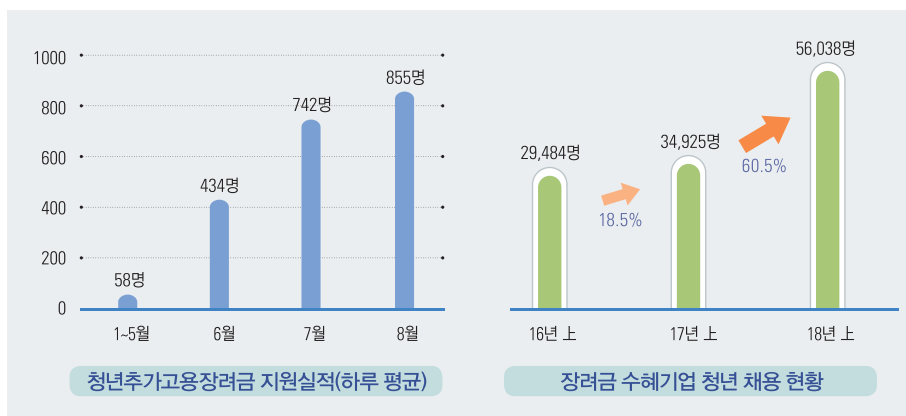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여전하여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한데도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면 인적자본 손실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가잠재력 저하로 이어진다. 인구구조가 우리보다 20년 선행하는 일본의 경우 1993년에서 2003년 사이에 대학을 졸업한 '취직 빙하기 세대'가 취업이 어렵다보니 상당수가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로 빠졌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향후 3~4년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서 '3.15 청년 일자리 대책'이 수립되었다.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강한 인센티브를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기업이 청년 채용에 적극 나서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성장유망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채용해야만 1명분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하였으나, 3명을 한꺼번에 채용할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어 현실성이 부족하였다. 이에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만 채용하더라도, 그리고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명만 채용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원금액도 1인당 연 67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8월 말까지 총 49,275명을 지원하였는데, 5월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58명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나 대책이 본격 시행된 6월 이후 지원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8월에는 하루 평균 855명을 지원할 정도로 반응이 좋은 상황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한명을 더 채용할지 고민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월부터는 TV 광고를 실시하여 더욱 많은 기업에서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지원 이전에 비해 고용규모가 45.4% 증가하였고, 고용보험 DB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장려금을 받은 기업도 지난해에 비해 청년 채용규모가 60.5%(2만 1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총 9만 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3,4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기존 9만 명에 신규 9만 8천 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7,145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취업 하는 청년에게는 자산형성의 기회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제대로 돕기 위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였다.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이 3년간 600만 원을 기여하면 정부가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3천만 원의 목돈을 만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재직 청년들에 대해서도 그간에 정부지원이 없었던 내일채움공제와는 별도로 정부가 1천만 원 이상 지원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소득세 감면, 주거비 용자, 산



단 교통비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청년들의 반응이 뜨거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4월에 이미 올해 목표인원 5만 명을 소진하여 추경을 통해 6만 명을 추가 편성하였고, 8월 말 현재 총 83,308명을 선발하여 75.7%의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청년이 첫 취업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5.9개월로 전체 평균 11.2개월(통계청, 2016년 5월 경찰청 청년층 부가조사)에 비해 약 5개월이 짧았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1년 이상 근속비율은 78.4%로 일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근속비율 48.6%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4,2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1조 374억 원을 편성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직청년의 근속기간 분석

	소 계	1년 미만 근속	1년 이상 근속
중소기업 취업 청년 ¹⁾	1,076,692명(100%)	553,821명(51.4%)	522,871명(48.6%)
청년공제 가입 청년 ²⁾	19,837명(100%)	4,290명(21.6%)	15,547명(78.4%)

주 1) '16년 고용보험 취득(계약직 제외)한 청년(15~34세, 5~3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상실 여부를 통해 근속기간 추적 (고용 보험 DB)

2) '18.6월말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고용유지율(단, 가입 후 1년 미도래자는 모수에서 제외)(중진공 DB)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 하는 어려움을 완화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준비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한다. 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어디서든 활용 가능한 클린카드를 발급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 준비활동을 하는데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청년 스스로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확인한 후에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들이 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해 취업을 늦추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기간 중에 청년이 취업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중단하되, 해당 기업에서 3개월 근무할 경우 취업성공금을 지급한다.

청년정책·청년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도 구축하고 있다. 중앙·지방정부 청년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 검색, 실시간 채팅 상담, 전국 청년공간 정보 제공 및 예약시스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기능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기존 청년워크넷 사이트를 개편하여 1단계 오픈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독립 사이트는 내년 3월 오픈 예정이다.

청년친화적 홍보로 청년들의 체감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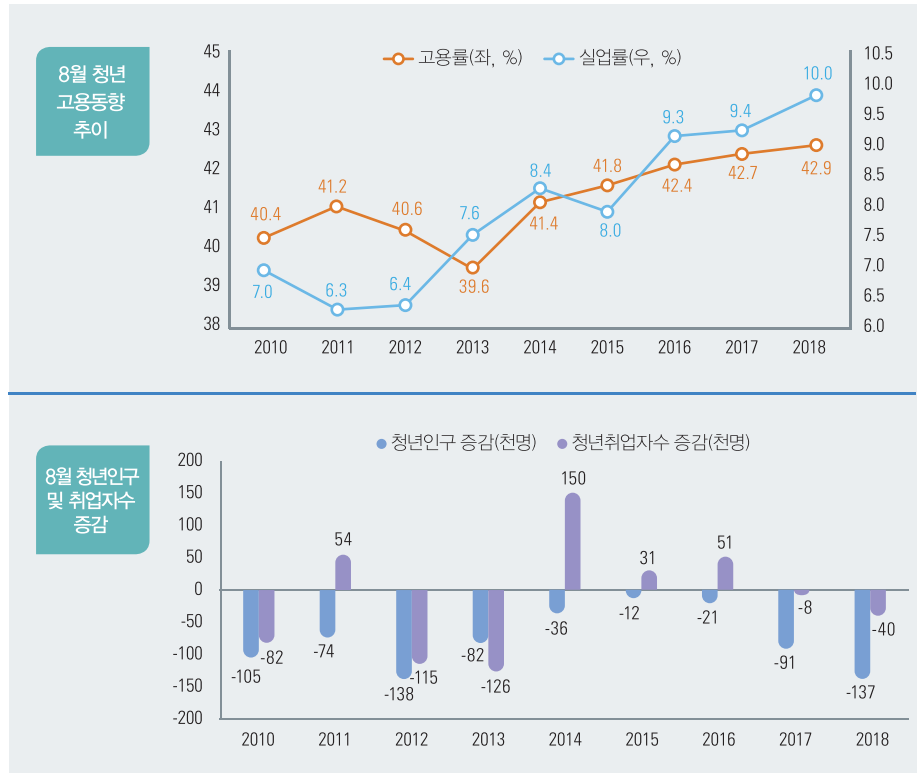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청년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하면 그 제도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청년정책블로그, 페이스북 라이브 등 청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직접 정책을 홍보하는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대학, 특성화고 등 청년들이 많이 있는 곳



을 직접 찾아가 정책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도 대책 발표 이후 5차례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처방도 지속 추진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에도, 청년(15~29세)고용률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대책의 주 타깃인 25~29세에서 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OECD 평균(17년 53.2%)보다 10%p 가량 낮고,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도 크다. 20대 초반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10대와 20대 초반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3.15 청년 일자리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이번 대책은 향후 3~4년간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사실이며, 3~4년 후 청년 일자리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훈련 혁신,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혁신성장 등 근본적인 처방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노사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협심이 필요한 때이다. **남광채**

김재훈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jaehk@daegu.ac.kr

PUBLIC FINANCE COLUMN

국가투자 프로젝트의 방향



국내외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팍스아메리카나를 유지하려는 미국이 도광양희를 베풀던지고 중국몽과 일대일로로 앞세운 중국에 대해 대대적인 견제를 가함으로써 산업 간 무역이 아닌, 산업내무역, 상품내무역이 일상화된 세계경제에서 모든 국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 'G2리스크'의 관리가 우선 필요하고, 여기에 이 충돌이 소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선점하고자 하는 경쟁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주목하게 된다.

중화학공업화와 정보통신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우리 경제도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국면에 처해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승패가 시장에서 판가름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오늘날의 선진국도 공업화 초기에, 또 그 후에도 성장단계에 걸맞은 정부의 개입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추격단계에는 선발국을 벤치마킹해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후발국의 이익'을 누리기가 어렵지 않으나 그 후에는 정부에 의한 사회적 자원의 집중적 배분은 그만큼 큰 투자실패를 낳는 위험(=정부 실패)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도 민간과 같이 시장에서 실험과 모색을 함께 추구하는 수준으로 역할이 재정리되고 있다.



경제이론에서는 특히 외부효과가 커서 민간이 투자를 회피하려 하는 R&D 투자를 국가가 맡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민간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시장경쟁이 격화되면서 민간기업도 그 상당 부분을 수행했다. 최근에는 R&D 투자를 범용기술과 응용기술 투자로 나누고 응용기술은 민간이 상업적 투자를 맡고, 범용기술 투자는 정부가 맡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미국이 오늘날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과거 국방과 우주항공 기술에 대한, 그리고 1990년대 정보고속도로에 대한 국가 투자의 결과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중화학공업화 단계에 산업의 쌀인 철강 부문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는 그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투자였다. 그 후 정보통신혁명의 반도체와 디지털기술은 민간기업의 투자로 성과를 올렸으나, 그 성공은 전(全)자동교환시스템, CDMA, 초고속 인터넷망 등의 기반기술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현 단계 한국경제에서 그런 기반기술이 무엇인가에 관한, 미래를 투시하는 예지력이 필요하다. 최근 ICBM(IoT-Cloud-Bigdata-Mobile) 혹은 DNA 등이 많이 거론됐는데 그 중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로 모아지는 것 같다. 확장성, 지속적 기술발전, 여타 산업에 보완적 혁신을 유발하는 범용기술의 조건에 인공지능(AI)이 가장 가깝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이 분야에 관한 투자가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턱없이 적고, 국가 R&D 시스템에서도 이 분야를 담당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보통신혁명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새로운 연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사정은 압축 성장 과정에 많은 성과를 낸 다른 연구개발체계(기관)들에도 해당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연구개발 지원체계는 부처별로 단일화하기로 정리되었지만) 정부 부처별 산하 연구기관의 역할 중복이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증폭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인간의 예지력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불확실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 특정의 (인공지능)기술보다 좀 더 넓은 기반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역시 그에 필요한 고급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공계 대학교육의 커리큘럼 조정이 필요하고, 추격단계의 노동력 양성에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주효했다면 이제 선도단계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





인 투자도 필요하다. 대학의 20%만 국가가 담당하고 사학이 80%인 우리의 대학체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짧은 역사에 세계를 선도하게 된 것은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 수준을 높였기 때문이고, 그것은 대학에 민간의 아낌없는 기부가 있다는 점과 함께 링컨 대통령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1862년 'Morrill Act' 제정으로 주립대학 설립 혹은 사립대학을 주립으로 전환한 'land-grant universities'를 통해 가능했다는 평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중국이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 미국 못지않게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이번 대결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보면 장비산업과 부품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등 더 넓은 산업기반의 취약함도 역시 중요한 문제다. 이 부분은 미래 범용기술 투자에 시차효과가 있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신기술에 맞게 사회 전반의 제도가 변화하고 응용기술에 의한 상업적 생산으로 이어져 생산성이 높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연구개발 분야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생산 분야 일자리 증대로 확산되지는 않아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연구가 많다. 이 때문에 기존 범용기술 관련 응용기술의 상업적 생산을 독려해야 하고, 미래기술과 관련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 이하인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정부가 중소중견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성장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창업열기에 차이가 없는 이유도 꼼꼼히 찾아봐야 하겠다.

4차 산업혁명 논의 등 불확실한 미래사회의 기술 발전에 관해 미국, 독일 등 타국에서의 논의를 추종하는 것은 시장의 규모로 볼 때 불가피한 면도 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에 관한 독자적인 문제의식에 근거해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기술 분야에 관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인류를 위한 기술 개발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이 될 때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 개발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심각한 기후변화를 맞이하여 신에너지기술에 관한 폭넓은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고, 세계적인 플랫폼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남광**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향



요즘 일자리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정부도 민간도 젊은이도 어르신조차도 일자리가 관심이다. 일자리는 경제가 활성화될 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걱정이다. 지난 1997년에 겪은 외환위기 사태는 외환, 경제 그리고 일자리가 서로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전 국민이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만든 바 있다.

이를 계기로 199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반면에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한 다양한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 제정 전 50억 달러를 넘지 못하던 투자유치실적은 매년 100억 달러(도착기준)를 넘나들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9년간 1,7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은 1만 5천개를 넘고 이들이 고용한 인원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6%에 해당한다.(2014년 기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크게 세 가지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조세지원제도는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관세 등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현금지원제도는 외국인투



자기기업의 사업소요 자금 중 토지매입비나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입지지원제도를 통해 공장부지 확보와 개발 후 저가나 무상 임대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2월 유럽연합에서 바로 이 외국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감면제도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조세 분야 비협조국으로 지정하여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조세감면제도를 포함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전체에 대한 개편방안이 지난 7월 발표된 바 있다.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3대 기본 원칙

- ① 국내외 기업 동일 지원
- ② 고용창출 및 신산업 중심 지원
- ③ 비수도권·낙후지역 중심의 지역 균형적 지원

이 개편방안은 국내외 기업 동일 지원, 고용창출 및 신산업 중심 지원, 비수도권·낙후지역 중심의 지역 균형적 지원이라는 3대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외국인에 한정된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하되 대신 현금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신성장기술수반기업의 지원요건을 크게 완화하며 경제특구제도를 손보고 지역균형발전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세제지원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타의에 의해 시작된 개편이지만 어차피 할 개편이라면 외환과 경제 그리고 일자리라는 연결고리가 탄탄히 연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고려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첫째, 투자유치 지원정책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6월에 발표된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세계투자보고서(WIR 2018)에서



는 전세계 101개 국가에서 공식적인 산업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며 이들 중 90% 이상이 세부적인 투자정책을 규정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투자정책과 산업정책이 필수불가결한 관계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투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양자 간 관계를 명확히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최근 미중간 무역 분쟁의 이면에서 나타나듯이 세계는 첨단 기술의 확보수단 중 하나로 기술력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용하고 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제도를 정교하게 바뀌고 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지만 국익에 저해되는 투자를 걸러낼 수 있는 법제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있어 그 요건과 범위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개정이 이루어지는 법률상에 인센티브 부여 세부기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점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시기를 놓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입법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관련 공무원과 위원회의 업무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투자유치에 있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자국 경제에 필요한 산업에 속한 기업을 직접 선정하고 연구한 후 먼저 접촉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기획유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 폭은 법률이 아니라 관련 부처(Economic Development Board of Singapore)의 내규에 따라 산업담당관들이 작성한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는 구조라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기구의 사후관리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현재 코트라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한 조직에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기능을 동시에 맡는 것보다는 다른 조직과 분담하여 전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수많은 투자협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산업발전과 투자유치에 적합하지 않다면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협정은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와 당사국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한 번 체결된 후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될 수 있어 주기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절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신청자료 작성에만도 큰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우리 측에서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 방안을 포함한 획기적 수준의 절차 간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인투자가 우리 산업발전의 촉매제 역할과 더불어 고용촉진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센티브 부여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제의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나관재**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junghlee@cau.ac.kr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 예정 2시간 전에 전격 연기하였다. 회의 취소 이유는 규제혁신 내용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공약의 하나인 혁신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며, 대통령도 그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시(人時)라 생각하며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멈추거나 그 동력이 약해져선 안 될 것이다.

규제개혁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에서도 규제와 전쟁을 선포하며 개혁을 외쳤지만, 여전히 규제개혁의 성과는 많지 않았다. 모든 규제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실효성 부족이나 그 목적을 달성하고도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면서 경쟁과 성장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만 없애더라도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혁신성장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혁신성장의 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먼저, 규제개혁은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해당 관련업계의 효율성 제고와 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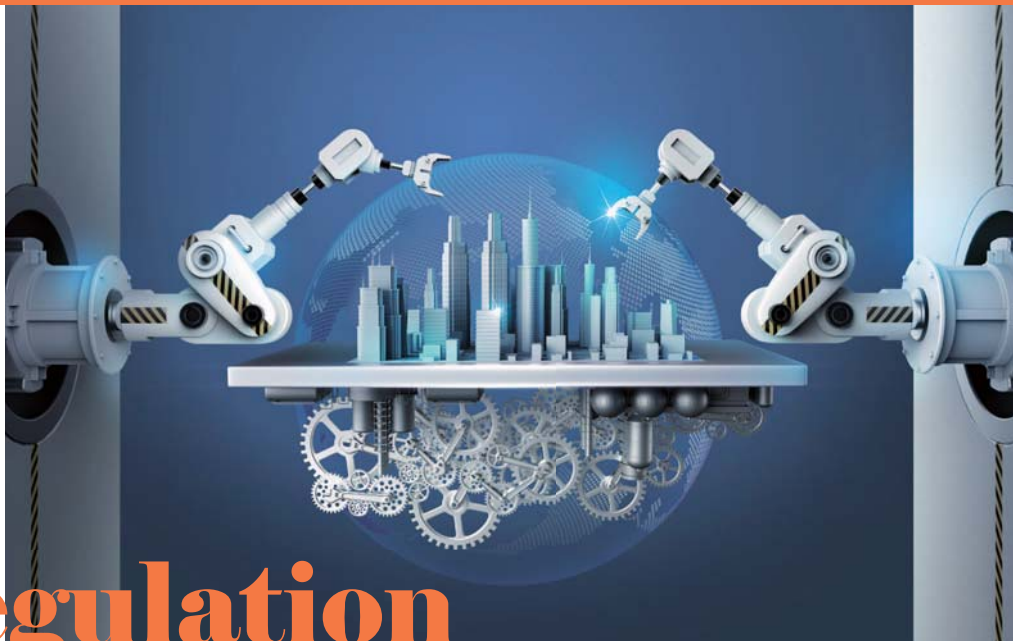
산업 파급 효과, 둘째 소비자 후생 증진의 효과, 셋째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규제의 원칙은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대상은 규제의 원칙을 따르지 않거나 규제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혁신창업에 있어서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신산업이 싹을 틔우려면 기존의 규제라는 걸림돌을 없애야 할 것이다.

물론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공정경제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시장에서의 경제적 약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경쟁시장에 그냥 맡겨두면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의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라도 규제의 실효성이 낮고 산업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떨어뜨린다면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시대에 규제로 인해 신산업이 궤도에 안착하는 것을 방해하



Regulation Innovation

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차, 드론, AI(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원격진료, 빅데이터, 공유경제 등을 포함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신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 필요성은 많이 이야기 되고 있으나, 실제로 법안 개정을 위한 국회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한국경제가 도약을 하려면 혁신성장이 꼭 필요하며, 그 혁신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은 해당 규제에 대한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각 정부부처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규제개혁에 정부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각 정부 부처가 대표적인 규제개혁 대안을 내놓도록 하고 우수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한 포상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일자리도 기존 산업에서 크게 일어나는 것은 점점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신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확보와 혁신성장은 바로 규제개혁에서부터 시작되기에 규제개혁과의 환관 정면승부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남광**





※ 툇아보다: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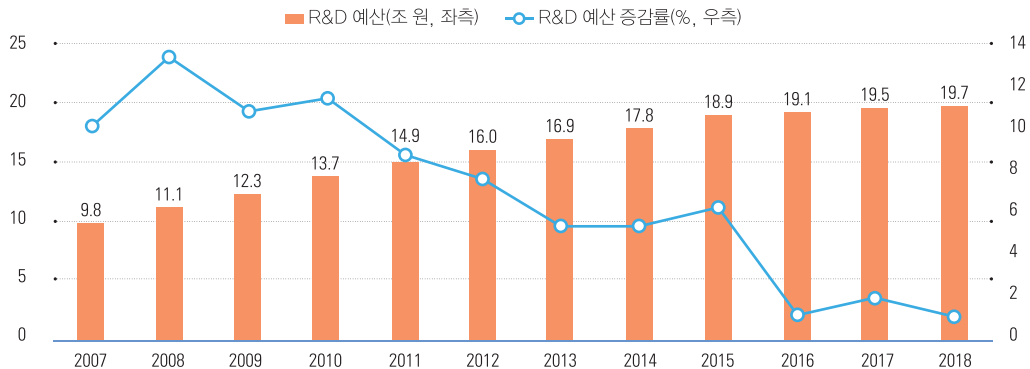
혁신성장 관련 정부예산 현황

R&D(12대 분야) 정부예산 추이

- 정부 R&D 예산은 2018년 기준 19.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4.6%를 차지
 - 정부 R&D 예산은 2007년 9.8조 원에서 2018년 19.7조 원으로 연평균 6.6% 증가
 -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중은 2009년 4.3%에서 2015년 5.0%까지 확대되다가 2018년 4.6%로 비중 축소

정부 R&D 예산 및 증감률 추이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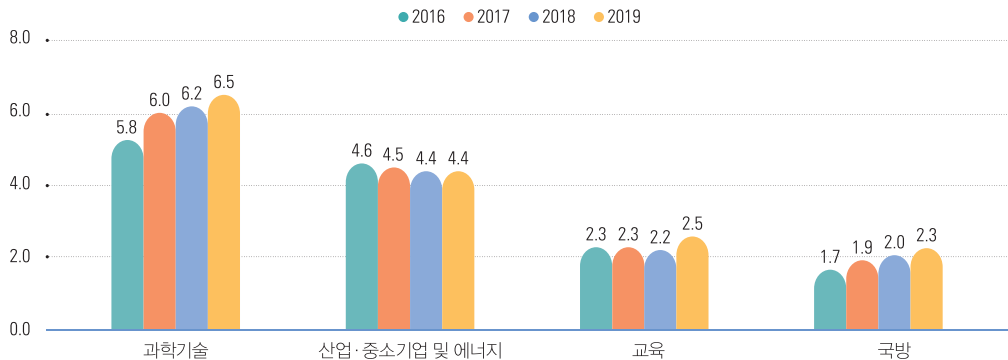
주: 정부 R&D 예산 분류는 12대 분류로만 작성되며, 예산기준으로 작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과학기술(6.5조 원)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4.4조 원) 분야 연구개발출연금 중심으로 집행 (2019년 예산안)

- 전체 연구개발출연금 18.9조 원 중 과학기술 6.5조 원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4.4조 원, 교육 2.5조 원, 국방 2.3조 원 지원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통상적으로 출연금 형태로 지원되며, 2016년 이후 연구개발출연금이라는 항목으로 별도로 관리

주요 분야 연구개발출연금 추이

(단위: 조 원)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분예산, 2019년 예산안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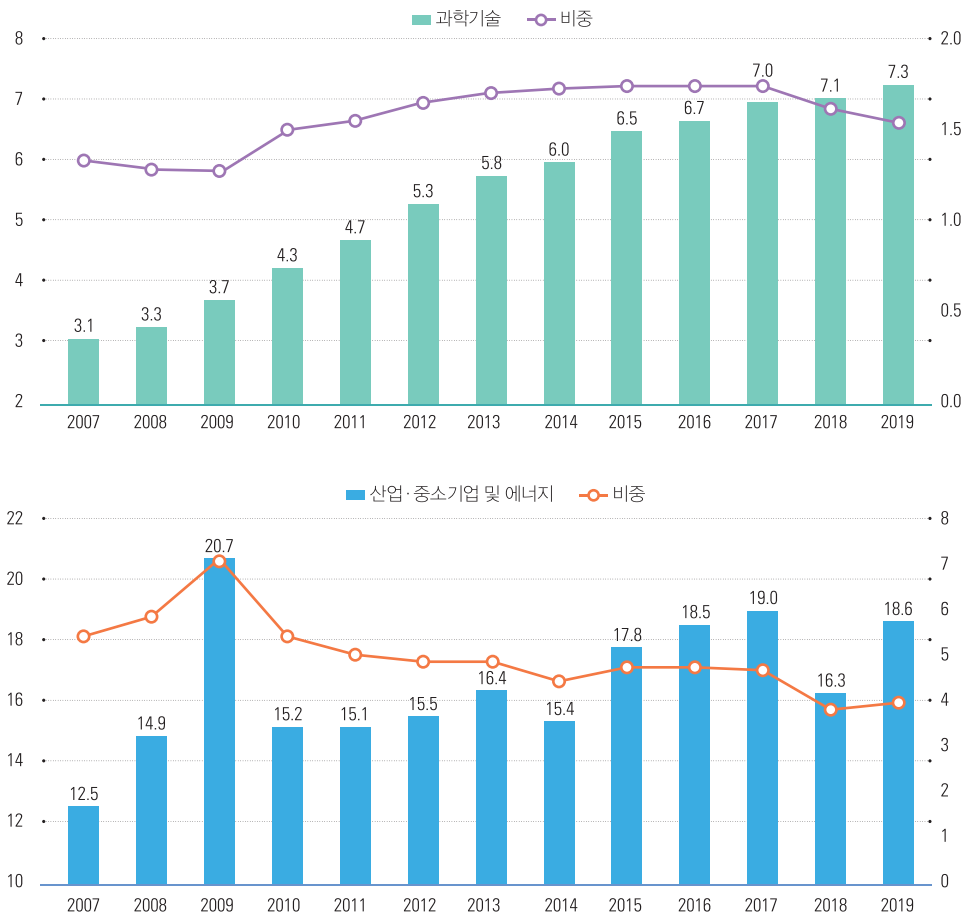


과학기술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재정지출(16대 분야) 추이

-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2019년 기준 7.3조 원으로 2007년 대비 연평균 7.3% 증가(전체 예산의 1.5% 차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은 2019년 기준 18.6조 원으로 2007년 대비 연평균 3.4% 증가(전체 예산의 4.0% 차지)

과학기술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재정지출(16대 분야) 추이

(단위: 조 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과학기술	3.1 (1.3)	3.3 (1.3)	3.7 (1.3)	4.3 (1.5)	4.7 (1.6)	5.3 (1.7)	5.8 (1.7)	6.0 (1.7)	6.5 (1.8)	6.7 (1.7)	7.0 (1.7)	7.1 (1.6)	7.3 (1.5)
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12.5 (5.4)	14.9 (5.9)	20.7 (7.1)	15.2 (5.4)	15.1 (5.0)	15.5 (4.8)	16.4 (4.9)	15.4 (4.4)	17.8 (4.8)	18.5 (4.8)	19.0 (4.7)	16.3 (3.8)	18.6 (4.0)
총지출	230.8	254.0	293.6	282.0	302.8	321.0	337.3	347.7	371.8	384.6	402.5	428.8	470.5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본예산, 2019년 예산안 기준이며, 괄호 안의 값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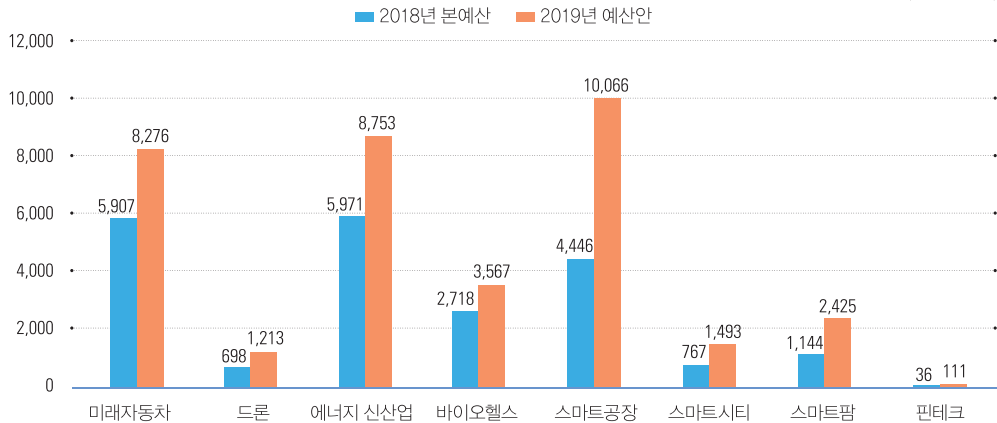


8대 핵심 선도사업 예산지원 확대(2019년 예산안)

- 4차 산업혁명의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8대 핵심 선도사업^{주)}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 집중 지원
 주)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국산화(177→188억 원), 제조공정 스마트화 기술 국산화(신규, 62억 원) 등으로 국내 연관산업 육성 지원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기술(960→1,328억 원), 의료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신규, 85억 원) 등으로 신시장 창출

8대 핵심 선도사업 2019년 예산안

(단위: 억 원)



구분	2018	2019	비고
8대 핵심 선도사업	21,686	35,904	· '18년 대비 65.6% 확대
· 미래자동차	5,907	8,276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개발 177→188억 원
· 드론	698	1,213	· 공공분야 드론 구매 8→236억 원
· 에너지 신산업	5,971	8,753	· 신재생 에너지 보급·금융지원 3,660→5,553억 원
· 바이오 헬스	2,718	3,567	·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플랫폼(신규) 85억 원
· 스마트 공장	4,446	10,066	·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782→2,661억 원
· 스마트 시티	767	1,493	·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265억 원
· 스마트 팜	1,144	2,425	· 스마트 팜 실증단지 조성(신규) 145억 원
· 핀테크	36	111	· 핀테크 지원사업(신규) 80억 원

주: 2018년은 본예산, 2019년 예산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예산안 개요」, 2018

재정과 정보

통합화, 표준화, 정보화를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신뢰성 있는 재정 통계로
투명한 국가재정 운용을 지원합니다



이슈포커스

유럽위원회(EC)의 「Ageing Report」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더 쉽고 편리해진 e나라도움이 찾아갑니다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월간 재정통계
테마통계: 사회복지 분야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폭염

해외재정동향

재정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주요국의 재정보고서 작성 사례: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고대 중국의 시장과 국가의 긴장관계

유럽위원회(EC)의 「Ageing Report」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한승희 재정운영지원팀 부연구위원

shhan@kpfis.kr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지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년마다 「Ageing Report」를 발간하여 각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Ageing Report」를 도입한 배경과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Ageing Report」의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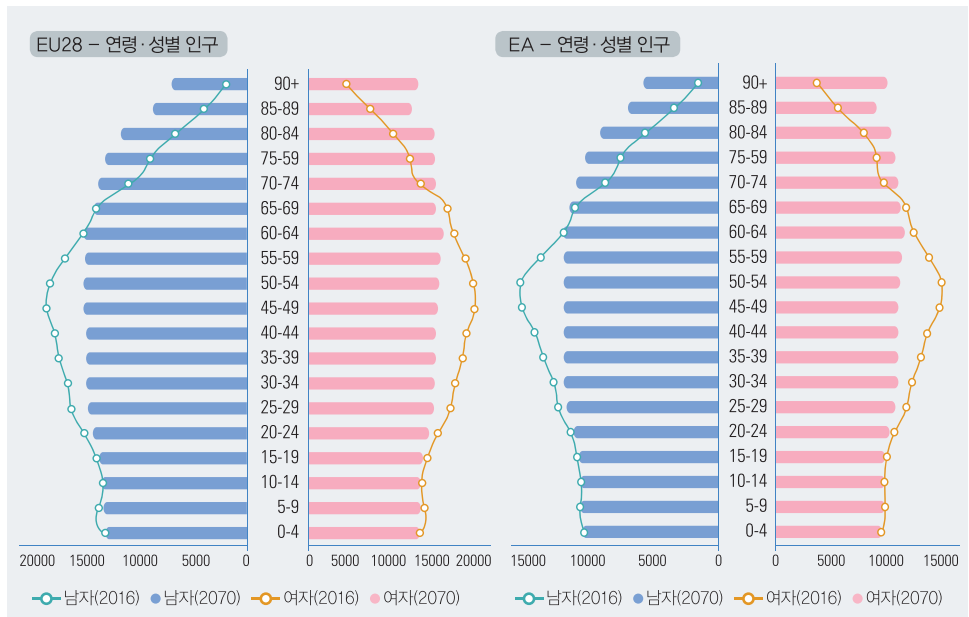
유럽위원회¹는 2009년에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추계한 「Ageing Report」를 발표하였으며, 2008년부터 2060년까지의 전망치를 제시하였다². 그 이후 3년 주기로 「Ageing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Ageing Report」를 발간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장기재정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유럽의 장기인구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 유럽 전체인구는 2016년 5억 1,100만 명에서 2070년 5억 2,000만 명으로 증가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 등

1 유럽위원회 산하 경제재무장관위원회(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ECOFIN)는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Policy Committee: EPC)에서 Eurostat가 제공하는 장기인구전망을 근거로 고령화로 인한 장기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추계하도록 하였다.

2 「2009 Ageing Report」에서는 EU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8년~2060년을 추계하였으며, 2012년에는 EU 27개 국가 대상 2010년~2060년, 2015년에는 EU 28개 국가 대상 2013년~2060년, 2018년에는 28개 EU국가 대상 2016년~2070년을 기간으로 설정하여 추계하였다.

〈그림1〉 유럽의 장기인구전망(2016년-2070년)



주: EU28(EU소속 28개 국가), EA(Euro Area)
자료: EC, 『The 2018 Ageing Report』, 2018

으로 3억 300만 명에서 2억 9,2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의 연령·성별 인구구조를 보면, 2016년 중간연령대의 인구가 많은 형태(항아리형)에서 2070년 전 연령대의 인구차이가 감소한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노년부양비(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2016년 29.6%에서 51.2%로 21.6%p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6년 3.3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다면, 2070년에는 2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위원회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시의 적절하게 대처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대처방안 중의 하나가 「Ageing Report」이며, 이 보고서에서는 각 국가의 경제·재정상황을 전망하여 어떤 국가에서 언제, 어느 정도로 고령화 부담이 가속화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Ageing Report」 분석결과를 통해 각국 정부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재정부담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기재정목표(Medium-Term Budgetary Objectives: MTOs)를 설정하거나 안정 및 성장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³의 일부로 매년 수행되는 재정지속가능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고령인구 증가가 노동시장과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3. 유럽의 회원국들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매년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고 정부부채가 GDP의 60% 이하가 되도록 규정한 재정준칙이다.

「Ageing Report」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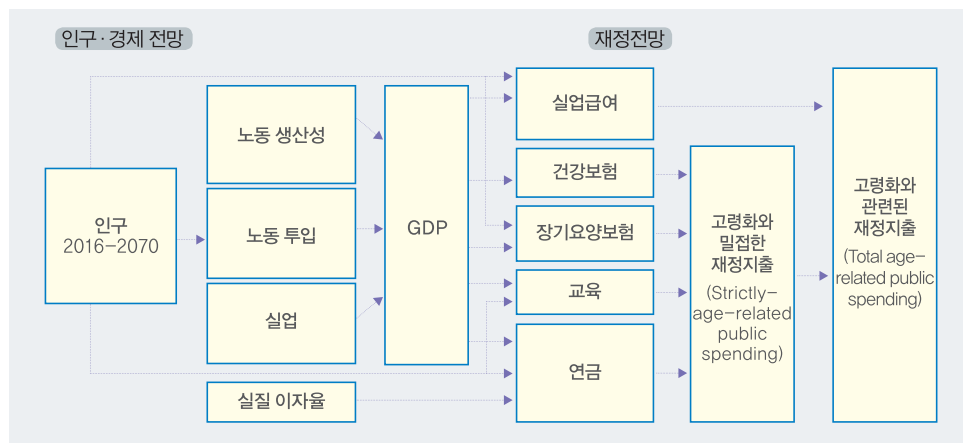
1 구성

「Ageing Report」는 장기재정전망에서 활용된 가정 및 방법론(Underlying Assumptions & Projection Methodologies)과 이를 적용한 EU 국가들의 경제재정전망(Economic & Budgetary Projections)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장기재정추계에 활용된 주료가정과 결과를 서술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급여, 교육부문의 고령화 관련 장기 재정지출 추계 방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부록에서는 각 국가별 인구 및 거시경제와 관련된 주료가정 추계결과와 이에 따른 연금, 건강보험 등 각 부문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치를 제시하였다.

2 추계 방법

「Ageing Report」의 장기전망은 Eurostat의 장기인구전망에서 시작된다(〈그림 2〉 참고). 이 인구전망을 근거로 하여 각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노동시장 참여율, 고용률, 실업률, 노동생산성 등을 구하기 위한 주요 가정과 전망방법을 확정한다⁴. 이와 같이 주요 가정과 방법을 확정하는 이유는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론에 따라 결과도 상이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각 국가의 거시경제 전망치를 도출한 이후 각 국가의 미래 GDP를 도출한다. 이후 고령화와 관련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교육, 실업급여 각각의 장기재정부담을 전망하고 이를 합하여 고령화와 관련된 재정부담을 도출한다⁵.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교육, 실업급여 각 부문별로 장기재정전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영역이 어디인지도 알 수 있다.

〈그림2〉 고령화 관련 장기재정전망 도출 방법



자료: EC, 「The 2018 Ageing Report」,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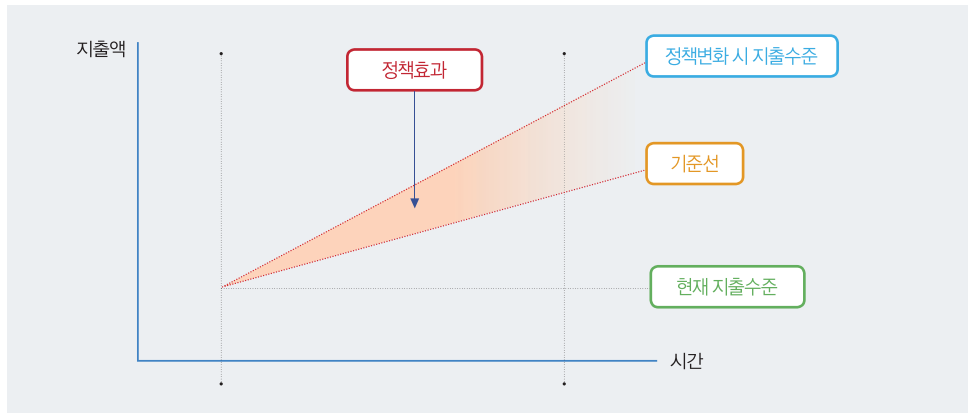
⁴ 유럽위원회 내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Policy Committee: EPC)의 고령화 위원회(Ageing Working Group: AWG)가 주료가정과 전망방법을 확정한다.

⁵ 지면의 제약으로 추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생략하였다. 「The 2018 Ageing Report – Underlying Assumptions & Projection Methodologies」의 Part 1에서는 주료가정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Part 2에서는 연금, 건강보험 등 5개 부문별 추계방법과 데이터, 민감도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기재정전망은 현재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이를 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이라고 하며, <그림 3>에서 기준선은 정책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장기재정 지출수준을 보여준다. 반면 지출증가가 예상되는 정책변화가 발생한다면, 장기재정전망결과는 <그림 3>의 정책변화 시 지출수준(policy level)으로 변화하게 된다. 장기재정전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변화가 없다면 일어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경우, 장기재정전망 결과도 변화한다. 정책변화와 경제변화에 따라 분석결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며, 「Ageing Report」에서는 민감도 테스트(sensitivity test)를 수행하여 그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그림3〉 기준선(baseline) 전망과 정책변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기준선 전망」, 2018 재구성

3 주요 분석결과⁶

「The 2018 Ageing Report」에서 GDP 대비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은 2016년 25%에서 2070년 26.7%로 1.7%p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 4> 참고). 각 국가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가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감소가 전망되는 국가들이다. 그리스, 크로아티아, 프랑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스페인은 GDP 대비 연금의 비중이 감소하며, 특히 그리스, 크로아티아, 프랑스는 GDP 대비 연금 비중이 3%p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10년 연금수급의 최소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스도 급여수준을 최대 44% 이상 감소시켰으며 수급연령을 67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연금개혁 효과가 장기재정전망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의 완만한 증가가 전망되는 국가들이다. 포르투갈, 덴마크,

⁶ 지면의 제약으로 노동생산성, 노동 투입, GDP 등 거시경제 가정에 대한 추계결과는 생략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The 2018 Ageing Report」 참고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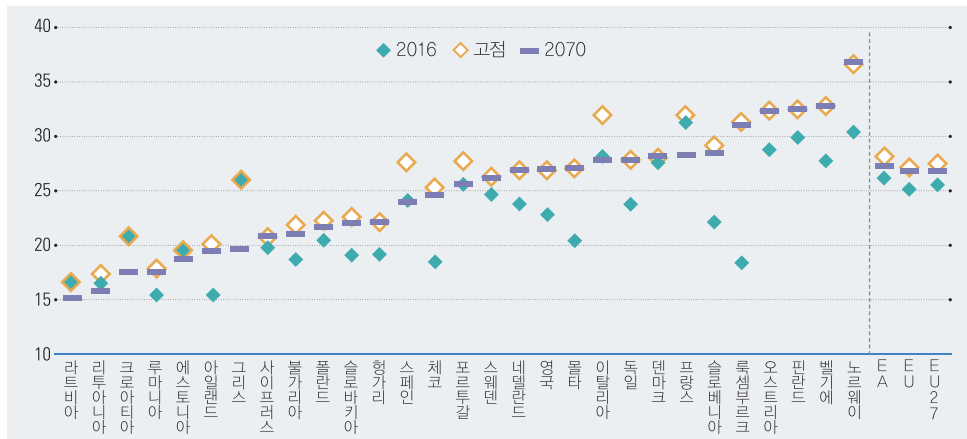
사이프러스, 폴란드, 스웨덴,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GDP 대비 고령화 관련 지출 비중이 2016년 대비 2070년 3%p 이하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세 번째로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들이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독일, 영국, 벨기에, 체코, 슬로베니아, 몰타, 룩셈부르크는 GDP 대비 3%p 이상 고령화 지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체코, 벨기에,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몰타는 2016년과 비교할 때 2070년에 GDP 대비 2.5%p 이상 연금지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5〉는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의 부문별(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급여, 교육)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EU국가 전체적으로는 주로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지출이 변동원

〈그림4〉 GDP 대비 고령화 관련 지출(2016년, 고점, 2070년 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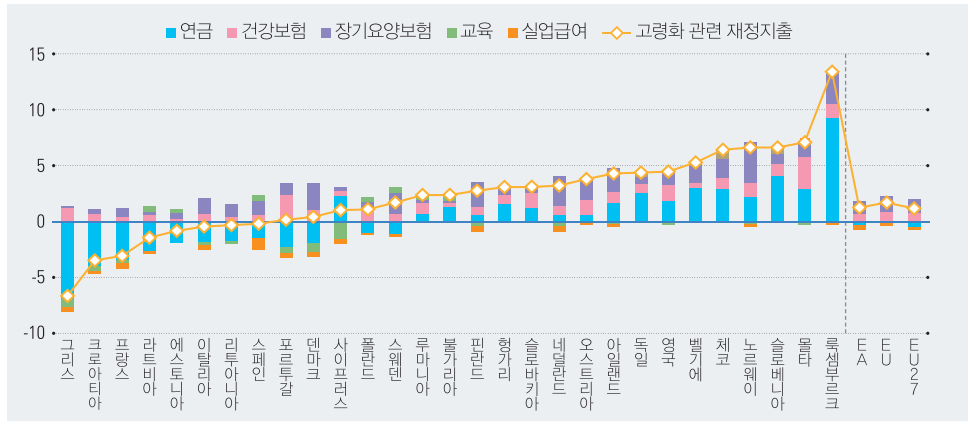


주: EA(Euro Area), EU27(영국을 제외한 EU 소속 27개 국가)

자료: EC, 『The 2018 Ageing Report, 2018』

〈그림5〉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부문별 변화

(단위: GDP 대비 %p)



주: EA(Euro Area), EU27(영국을 제외한 EU 소속 27개 국가)
 자료: EC, 『The 2018 Ageing Report』, 2018

인으로 분석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의 비중은 2016년 대비 2070년 1.2%p 상승하며, 건강보험의 비중은 0.9%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적연금 지출은 2040년까지 GDP대비 0.8%p 증가하다가 2016년 수준(EU: -0.2%, EA: -0.4%)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으로 인한 연금지출의 감소는 전망 기간의 후반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취학 연령인구의 감소로 교육비 지출부담은 감소하지만 교육 성취도에 대한 기대감은 이 효과를 상쇄해 교육 지출 비중은 2070년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업급여 지출 비중은 GDP 대비 0.2%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금개혁의 시행으로 그리스, 크로아티아, 프랑스, 라트비아, 포르투갈, 덴마크,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의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6〉을 보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적연금 급여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0.6%p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그리스, 폴란드, 포르투갈, 사이프러스, 스페인의 공적연금 급여율 감소는 20%p 이상

〈그림6〉 총 공적연금 급여율 변화(2016년, 207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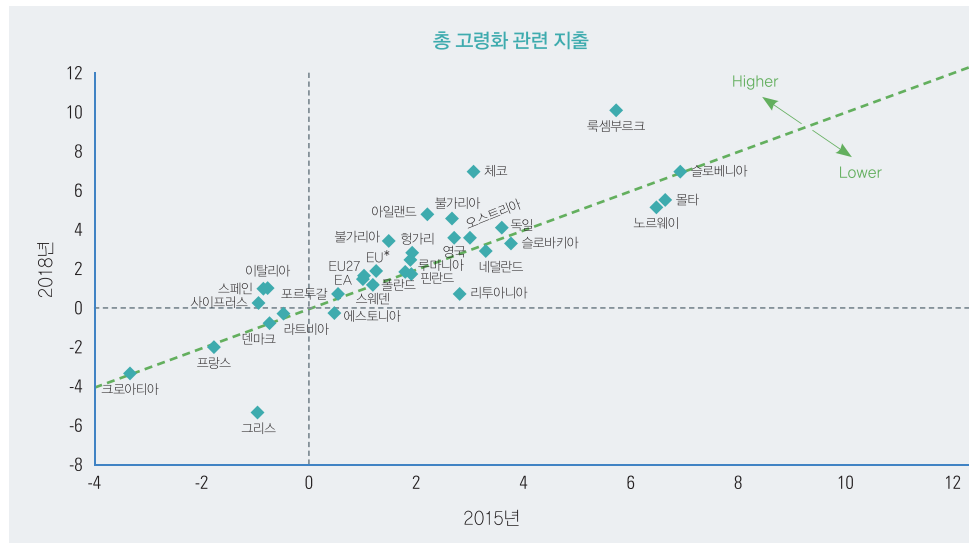
자료: EC, 『The 2018 Ageing Report』, 2018

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급여율을 낮추는 연금개혁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러한 반발로 연금개혁안이 수정된다면, 향후 장기재정전망 시 지출증가 요인(risk)으로 작용할 수 있다.

「The 2018 Ageing Report」 분석결과를 2015년과 비교하면, 에스토니아, 그리스, 프랑스, 리투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을 제외한 EU 국가들의 고령화 관련 장기 재정 지출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림 7>은 2015년과 2018년의 분석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좌상향에 있는 국가들은 2015년 대비 2018년 장기재정전망 지출이 증가한 국가들이며, 우하향에 있는 국가들은 감소한 국가들이다. 이와 같이 2015년 대비 2018년 장기재정전망 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주로 연금지출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증가 때문이다.

〈그림7〉 2015년과 2018년 Ageing Report 분석결과 비교

(단위: GDP 대비 %p)



자료: EC, 「The 2018 Ageing Report」, 2018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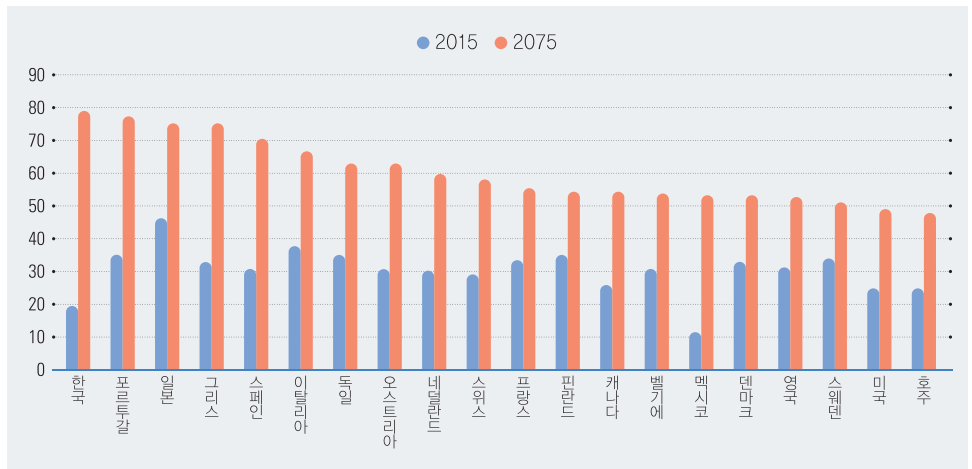
한국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16년 82.4세로 30.1세가 증가한 반면, 합계출산율⁷은 1970년 4.5명에서 2016년 1.2명(2017년 1.05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8>을 보면, 2015년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19.4%)이지만, 2075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78.8%)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2월 한국 정부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활용하여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오고 있다.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각 부문별 추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⁷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그림8〉 OECD 국가별 노년부양비 비교 (2015년, 2075년)

(단위: %)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

고령화와 밀접한 장기재정부담을 추계한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보다 먼저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면한 유럽의 대응방안 중 하나인 「Ageing Report」를 참고하여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 년도 예산편성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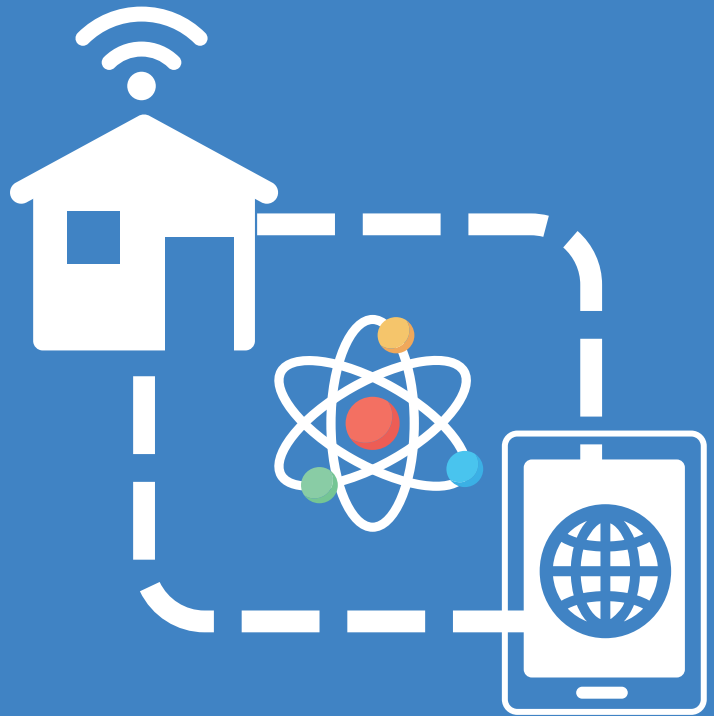


더 쉽고 편리해진 e나라도움이 찾아갑니다

최은영

e나라도움운영단 과장

cey0219@kpfis.kr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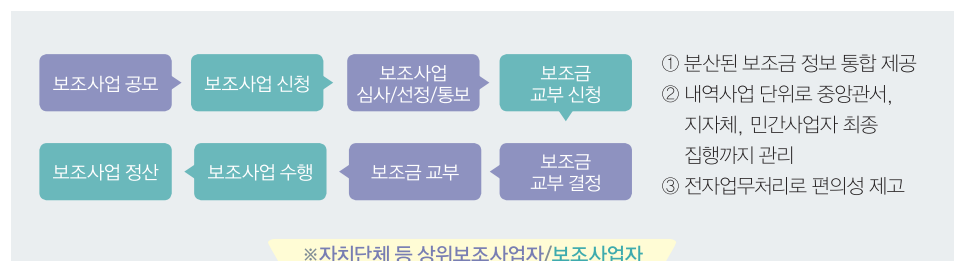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관리하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이 2017년 7월 전면 개통한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e나라도움은 개통 초기의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제 막 첫 돌이 지난 e나라도움에 기대하는 바도 많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 시점에서 그간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01 운영성과

업무 편의성 향상 - 보조금 업무, 모든 처리를 e나라도움에서!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사업 처리절차의 표준화·시스템화를 통해 모든 보조사업 정보를 한 곳

e나라도움에서 보조사업의 전 과정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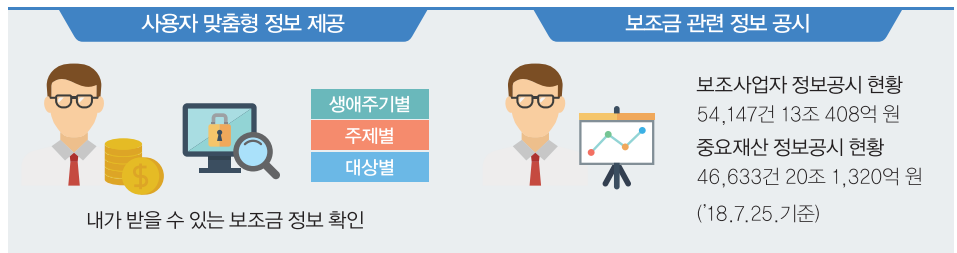
국고보조금

2018년 정부 전체 예산 428조 원의 15.6%에 해당하는 66.9조 원 규모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정부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

에서 찾을 수 있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조금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 업무처리를 통해 보조금 사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투명성 강화 - 보조금 정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e나라도움은 생애주기별·주제별·대상별로 맞춤형 정보 지원을 통해 수혜 가능한 보조금 정보를 제공한다.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중요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시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수입·지출 내역, 정산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공시하는 제도

02 개선방향

e나라도움의 운영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시스템 적응에 대한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만여 명의 e나라도움 사용자 중 69%인 14만여 명이 재정 용어가 낯설거나 재정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다.

그래서 더 쉽고 편리한 e나라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e나라도움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총 822건의 사용자 의견을 받아 262건의 개선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262건 중 211건(81%)은 2018년 상반기에 개선 완료되었다.

사용자 의견 수렴 현황

구분	의견(건)	개선과제(수)
사용자(UX) 편의 개선 컨설팅('17.9월)	17	8
17개 시·도 현장 간담회('17.11월)	50	44
사용자 의견수렴 게시판('18.1월)	755	210
합계	822	262

2018년 기능개선 7대 주요과제

01 서류 제출 없는 정산

2019년부터는 e나라도움을 통하면 서류 제출 없는 정산이 가능하다. 보조금을 정산 받는 기관에서는 온라인으로 정산서류를 확인하고 일괄 출력할 수 있어 보조사업자의 서류 제출 업무가 크게 줄어든다.

정산서류 일괄출력 지원

e나라도움에서 보조사업 정산서류를 출력할 때 하나씩만 출력 가능해서 업무 시간이 많이 걸리던 것이, 앞으로 정산서류가 한꺼번에 출력 가능해짐에 따라 정산 업무 시간이 줄어든다.

정산서류 간소화

계좌이체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e나라도움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는 별도 등록 없이 자동으로 지출결의서와 함께 등록되어 정산서류가 간소화된다는.

▶ 문화예술계는 57개 항목 175개 증빙서류가 75개로 100개(57.1%)의 서류가 감소된다.

02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서비스 개선으로 보조금 사용이 더 편리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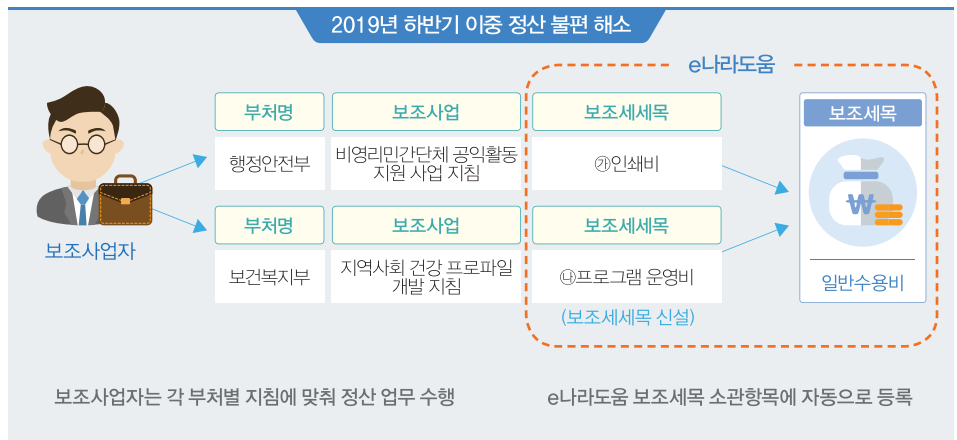
- ① 2018년 4월부터 보조금 이체 시간 연장(16시→20시), 예약 이체 등을 통해 보조금 이체서비스가 편리해졌다.
- ② 모바일 이체 서비스를 도입(2019년)하여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기기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0만 원 미만의 소액보조금은 OTP 없이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 ③ 보조사업자는 계좌의 예탁금과 잔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집행할 수 있다.



03 이중 정산 부담 완화

보조사업자의 이중 정산 부담이 완화된다. 중앙부처별로 보조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비목이 달라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정산한 후 해당 부처 지침에 맞춰 오프라인으로 다시 정산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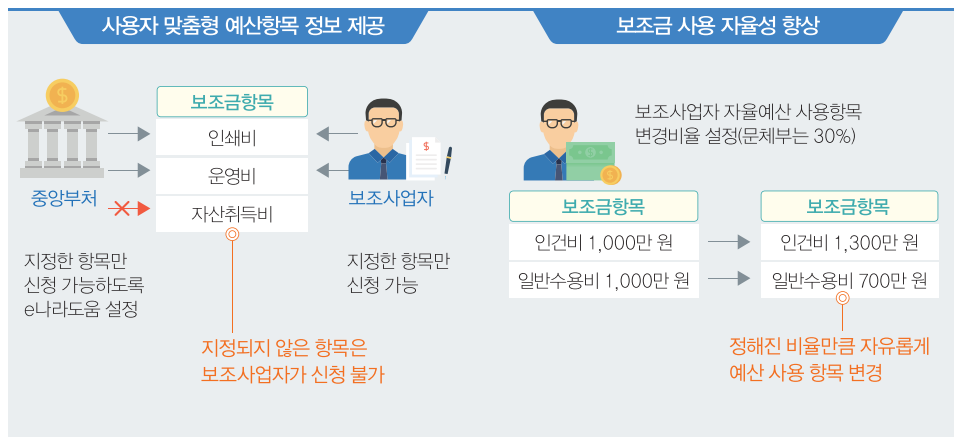
▶ 2019년 하반기부터는 부처별 보조금 지침에 맞춰 정산업무를 해도 e나라도움 예산비목에 자동으로 변경되어 등록되므로 이중 정산의 불편이 해소된다.



04 맞춤형 예산 항목 정보 제공

예산 항목 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보조금 사용에 자율성이 보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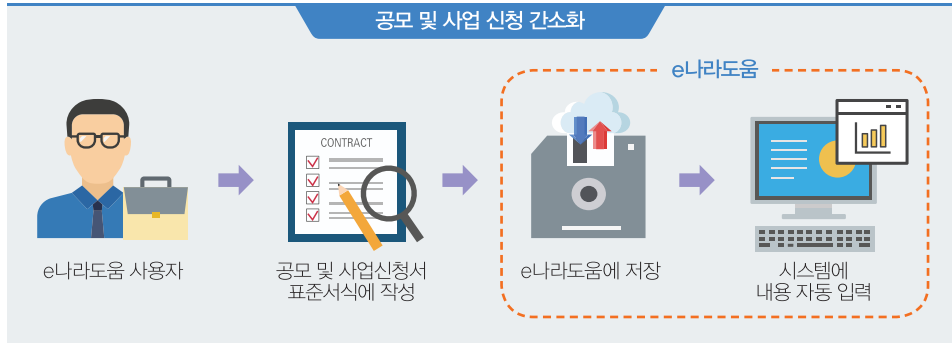
- ① 2019년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에 맞춰 맞춤형 예산 항목 정보를 제공하여 보조사업자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조사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중앙부처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상위보조사업자 승인 없이 자유롭게 예산 사용 항목 변경이 가능해진다. (문화예술계의 경우 30% 이내 변경 허용)



05 공모 및 사업 신청 간소화

e나라도움이 아닌 다른 부처의 시스템에서 보조사업에 선정되면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서를 또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2018년 4분기부터 표준 공모 파일 제공을 통해 보조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공모신청서 및 사업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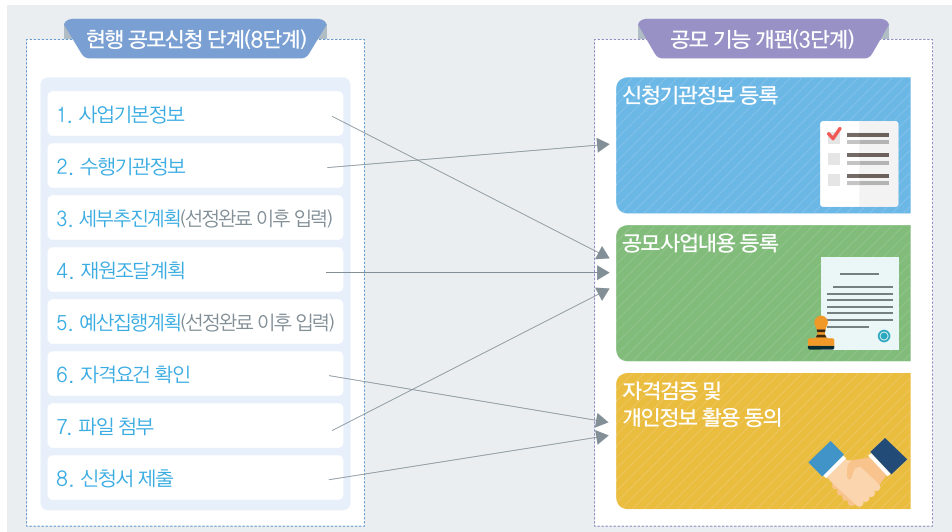


06 One-Stop 공모신청

One-Stop 공모신청 개선으로 업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한다. 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공모 등록 시 단계(8단계)가 복잡하고 입력 항목이 여러 화면에 분산되어 공모 신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 2018년 4분기부터 e나라도움은 공모 화면구성을 단순화하고 입력 과정을 8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One-Stop 공모신청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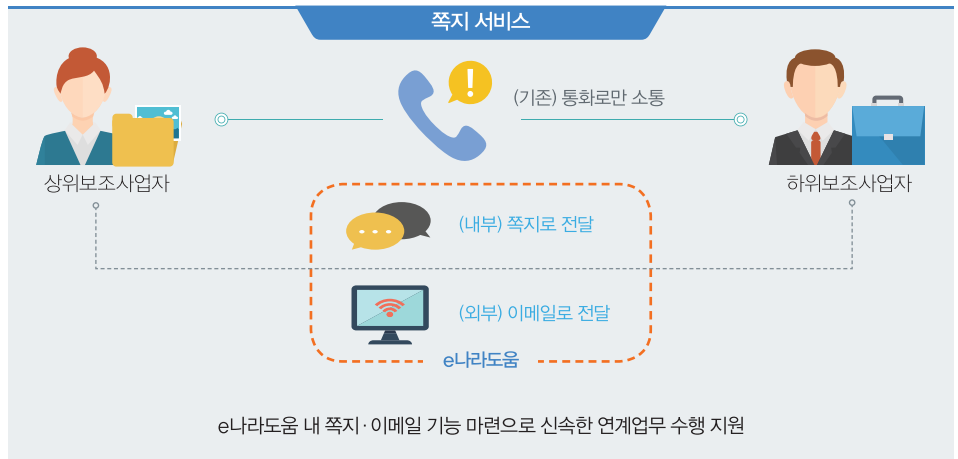
공모 기능 개선 AS-IS와 TO-BE



07 정보 교류 활성화 지원

① 쪽지 서비스 제공

2018년 4월부터 쪽지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업무 협력이 가능해졌다. 교부신청, 보조사업 변경, 정산 보완 등 주로 전화로만 가능했던 상·하위 보조사업자 간 소통업무를 e나라도움에 마련된 쪽지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② e나라도움 카페 개설

2018년 5월부터 신통방통 e나라도움 카페를 개설하여 e나라도움 사용자 간의 지식공유와 정보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맺음말

e나라도움은 이번 개선과제를 통해 사용자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여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으로 탈바꿈하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한다. 기존의 '관리' 마인드에서 '고객감동' 마인드로 변화하여 사용자가 먼저 찾는 명품시스템이 되고자 한다. e나라도움의 활용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복·부정수급 방지라는 소기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결과로 수반될 것이다. 국민이 복잡한 보조금 업무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쉽고 편리한 e나라도움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된다. **나랑**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01 월간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재정운용동향

총수입
291.9조 원

총지출
282.7조 원

통합재정수지
9.2조 원

관리재정수지
-15.5조 원

2018년 7월 중 총수입은 48.1조 원, 총지출은 35.4조 원이다.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291.9조 원으로 진도율은 65.2%이고 전년 동기 대비 24.7조 원 증가(진도율 2.0%p 상승)하였다.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282.7조 원으로 진도율은 65.3%이고 전년 동기 대비 31.6조 원 증가(진도율 4.1%p 상승)하였다.

(단위: 조 원, %)

	2017년						2018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총수입 (진도율)	267.2 (63.1)	299.4	329.6	372.4	399.2	430.6	50.8	77.4	121.2	169.9	214.0	243.8	291.9 (65.2)
총지출 (진도율)	251.1 (61.2)	282.0	317.0	345.2	370.0	406.6	35.8	76.5	122.9	169.6	205.3	247.3	282.7 (65.3)
통합재정수지	16.1	17.4	12.7	27.2	29.2	24.0	15.0	0.9	-1.8	0.2	8.7	-3.5	9.2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4.4	27.6	31.2	34.6	37.9	42.5	2.5	4.8	8.8	13.8	17.9	22.0	24.7
관리재정수지	-8.3	-10.2	-18.5	-7.4	-8.8	-18.5	12.6	-3.9	-10.5	-13.6	-9.2	-25.5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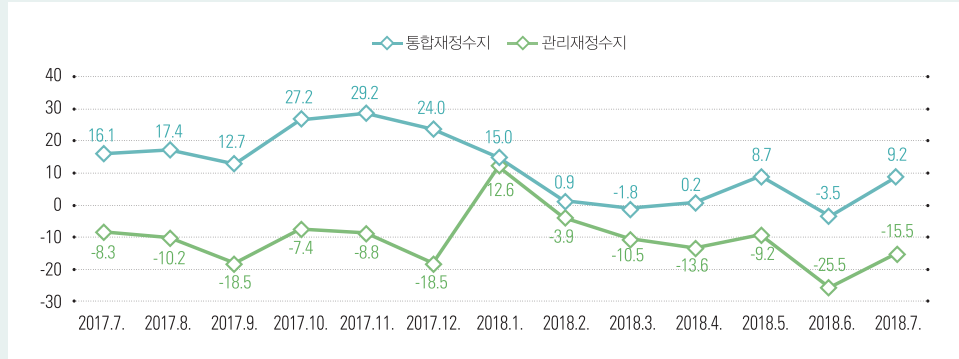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go.kr)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9.2조 원 흑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24.7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5.5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6.9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7.2조 원 악화되었다.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국세수입 추이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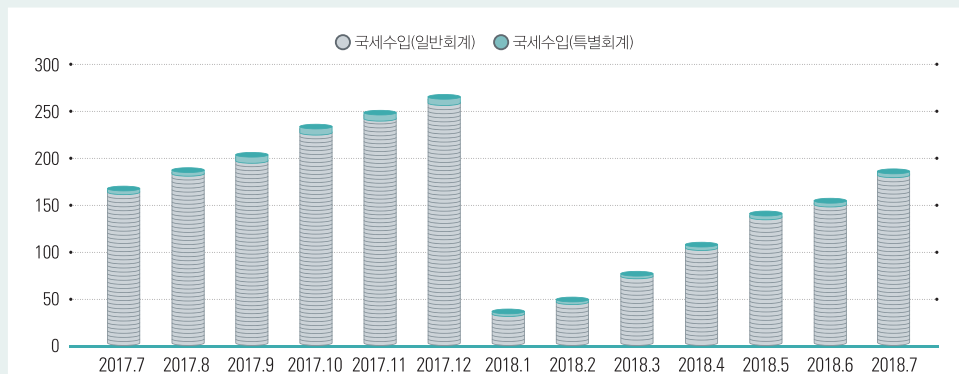
184.9 조 원

특별회계

5.3 조 원

2018년 7월 중 국세수입은 33.0조 원(부가가치세 17.9조 원, 소득세 7.2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 원 증가하였다.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190.2조 원이며, 일반회계 184.9조 원과 특별회계 5.3조 원으로 구성된다.

(단위: 조 원)



	2017년						2018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총국세수입	168.7	189.5	207.1	236.9	251.9	265.4	36.6	49.9	78.8	109.8	140.7	157.2	190.2
일반회계	164.4	184.8	202.0	231.0	245.7	258.5	35.4	48.4	76.8	106.6	137.0	152.9	184.9
특별회계	4.4	4.8	5.1	6.0	6.3	6.9	1.2	1.5	2.0	3.2	3.8	4.3	5.3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중앙정부 채무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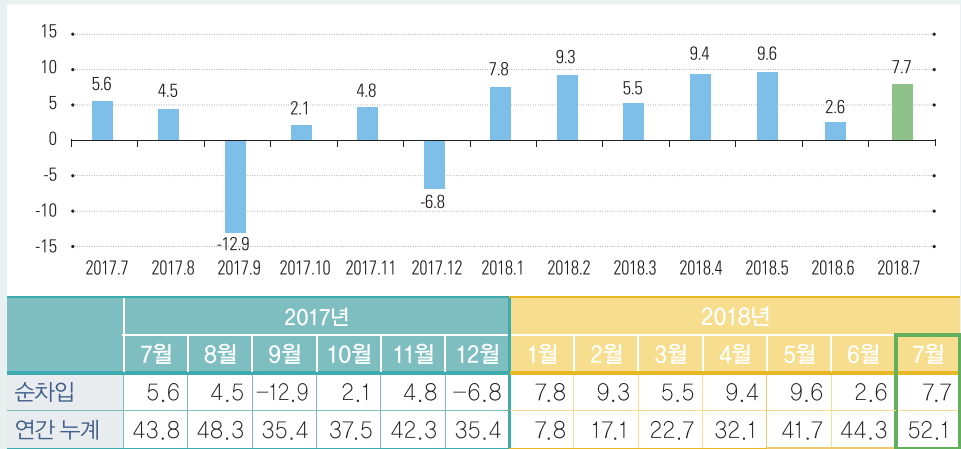
순차입 추이

순차입 전월 대비

7.7조 원

2018년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9.4조 원이다. 순차입 규모는 국고채권(7.1조 원), 국민주택채권(0.7조 원) 잔액 증가 등에 따라 전월 대비 7.7조 원 증가하였다. 2017년 7월과 비교할 때 월별 순차입액은 2.1조 원 증가하였다.

(단위: 조 원)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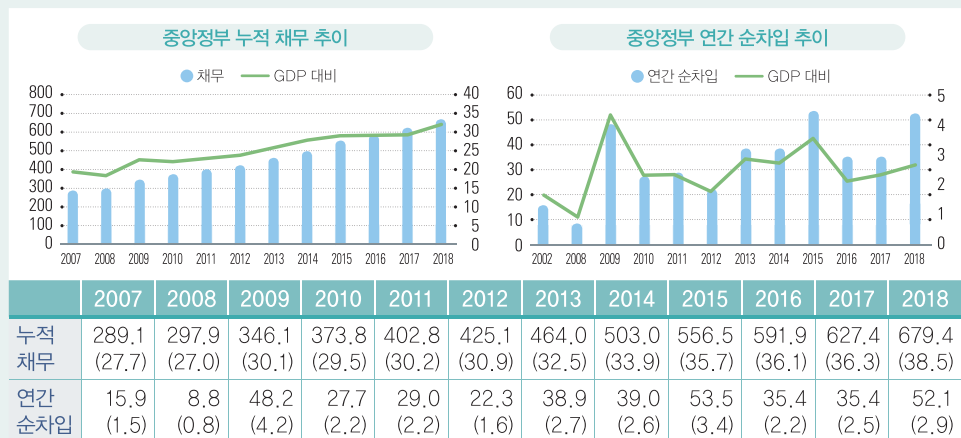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go.kr)

(단위: 조 원, %)

중앙정부 채무 추이

누적 채무

679.4조 원



주 1) 괄호안은 GDP 대비 비중

2) 2018년 GDP는 한국은행 전망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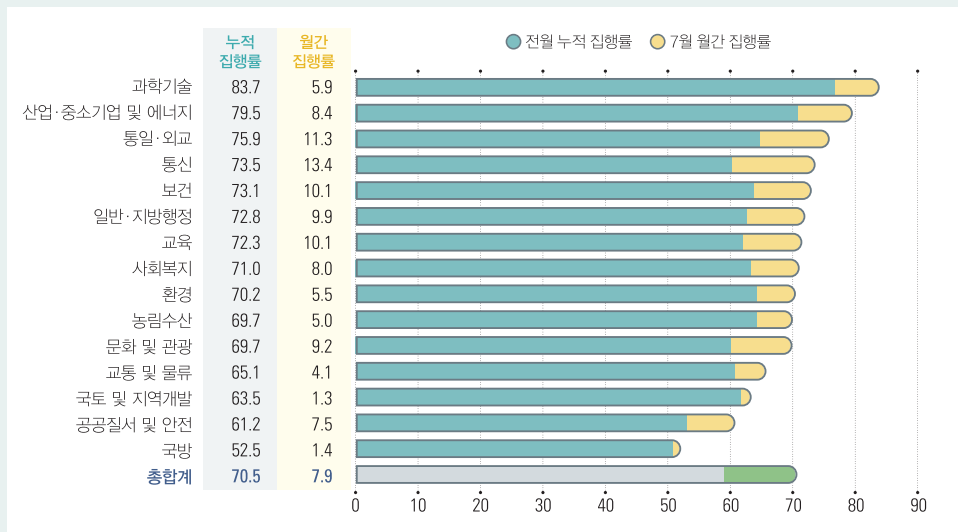
주요 관리대상사업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실적

7월 누적 집행률
70.5%

2018년도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앙부처 예산 238.6조 원 중 7월 말까지의 누적 집행액은 168.3조 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70.5%를 집행하였다. 7월까지 분야별 누적 집행률은 과학기술(83.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79.5%), 통일·외교(75.9%), 통신(73.5%) 분야의 순으로 높으며, 국방(52.5%), 공공질서 및 안전(61.2%), 국토 및 지역개발(63.5%) 분야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7월 월간 집행액은 19.0조 원(7.9%)이며, 분야별로는 통신(13.4%), 통일·외교(11.3%), 교육(10.1%) 분야의 월간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고보조금

2018년 국고보조금 예산(본예산 기준)은 66.9조 원으로 전년도 예산 59.6조 원에 비해 약 7.3조 원 증가하였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예산현액은 68.9조 원이며, 7월 누적 실적행 실적은 31.2조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3% 집행되었다.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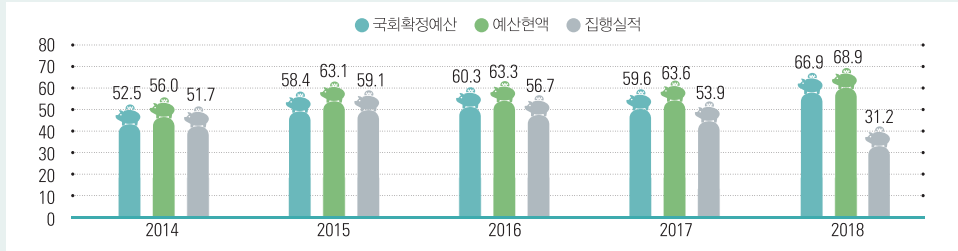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7월 누적 집행률

45.3%

(단위: 조 원)



주: 2018년은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집행행액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분야별

국고보조금

집행률

가장 높은 교부집행률

88.3%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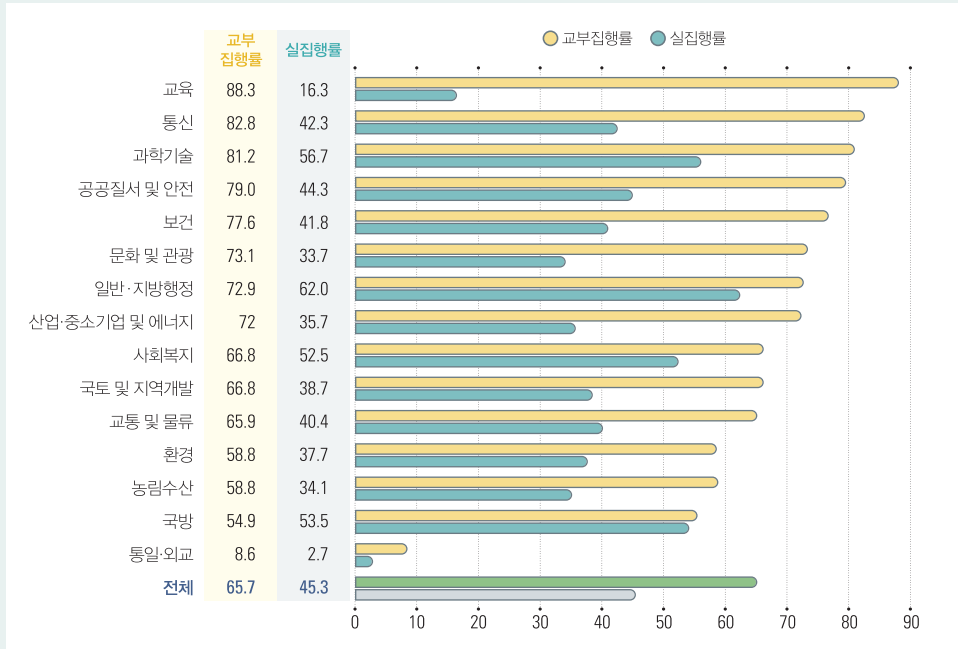
가장 높은 집행률

62.0%

(일반·지방행정)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는 20조 1,531억 원, 농림수산 분야는 3조 1,855억 원, 환경 분야는 1조 7,44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조 4,00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조 1,661억 원으로 집행행액이 나타났다. 예산현액 대비 교부집행률을 나타내는 교부집행률은 교육 분야가 88.3%로 가장 높지만, 예산현액 대비 집행행액을 나타내는 집행률은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62.0%로 가장 높다.

(단위: %)



주: 2018년 7월 누적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02 테마통계: 사회복지 분야

이번 호부터 분야별 지출 현황 및 특성을 알아보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교육 등 15대 분야(예비비 제외)별 현황 및 특징을 매월 소개할 예정이며, 이번 호는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 사회복지**
- 통일·외교
- 일반·지방행정
- 보건
- 문화·관광
- 교통·물류
- 환경
- 과학기술
- 교육
- 공공질서·안전
- 통신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농림·수산
- 국방
- 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재정구조와 추이

2019년 예산안
150.0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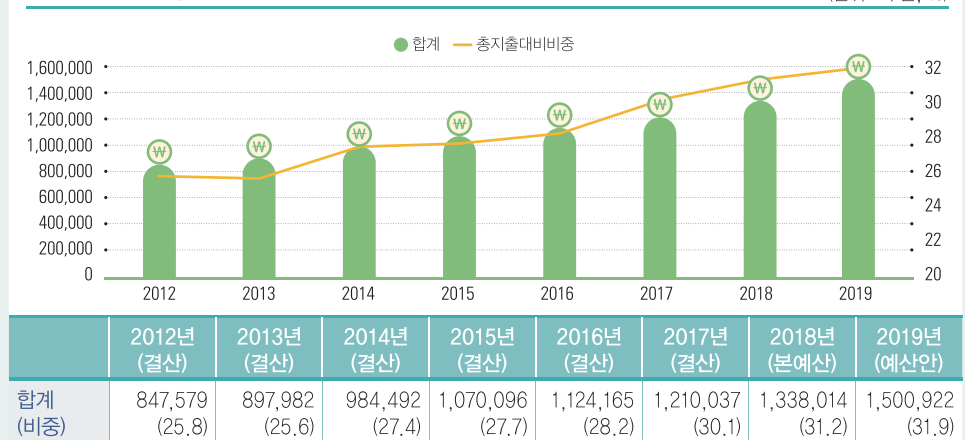
2018년 본예산
133.8조 원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또한 가장 증가규모도 크다. 2018년 사회복지 분야 규모(예산안)는 2019년 150.0조 원이며, 총지출 대비 3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규모는 2012년 84.8조 원 대비 약 1.7배 증가한 것이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5.8% 대비 6.1%p 증가하였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15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 기존 제도의 수급 범위 확대 및 수급액 증가에 따라 다른 분야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영유아보육료(만 0~2세), 2013년 영유아보육료(만 0~5세)와 가정양육수당(만 0~5세)이 도입되었으며, 2014년에는 기초연금이 확대되고, 2015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었으며, 2016년에는 맞춤형 보육지원이 확대되었다.

사회복지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 원, %)



주 1)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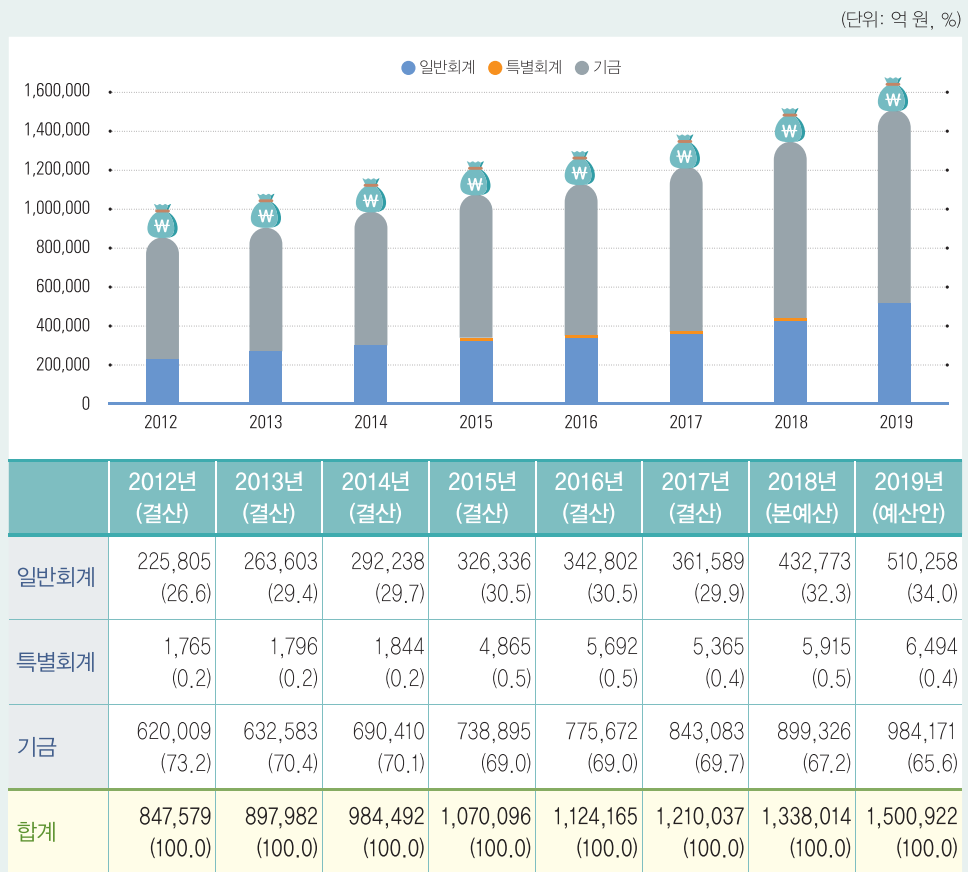
회계·기금별 현황 (2019년 예산안)

일반회계
51.0조 원

특별회계
0.6조 원

기금
98.4조 원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19년 일반회계 51.0조 원, 특별회계 0.6조 원, 기금 98.4조 원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는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이전지출이 있으며, 기금은 공적연금 급여지출과 주택부문의 용자 등이 있다. 회계·기금별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70% 내외를 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30% 내외를 일반회계가 차지하고 있다.



주 1)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주요 기금의 사업비 추이 (2019년 예산안)

주택도시기금
26.1조 원
국민연금기금
24.0조 원

2019년을 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은 총 18개로 구성되며, 주택도시기금(26.5%), 국민연금기금(24.4%) 순으로 규모가 크다.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연금기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1.7%와 10.3%로 주요 기금 중 증가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단위: 억 원, %)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주택도시기금	193,227 (31.2)	177,319 (28.0)	202,551 (29.3)	205,836 (27.9)	210,626 (27.2)	235,772 (28.0)	232,745 (25.9)	261,021 (26.5)
국민연금기금	121,226 (19.6)	137,963 (21.8)	144,290 (20.9)	158,507 (21.5)	177,317 (22.9)	197,637 (23.4)	218,788 (24.3)	240,280 (24.4)
공무원연금기금	127,103 (15.0)	131,353 (14.6)	147,388 (15.0)	158,614 (14.8)	161,229 (14.3)	169,746 (20.1)	185,400 (13.9)	191,423 (19.5)
고용보험기금	59,879 (9.7)	64,812 (10.2)	70,026 (10.1)	81,245 (11.0)	88,672 (11.4)	94,607 (11.2)	109,223 (12.1)	129,794 (13.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7,134 (7.6)	46,098 (7.3)	47,030 (6.8)	49,727 (6.7)	51,473 (6.6)	53,078 (6.3)	59,256 (6.6)	59,807 (6.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35,443 (5.7)	37,118 (5.9)	38,738 (5.6)	42,014 (5.7)	40,495 (5.2)	42,174 (5.0)	41,705 (4.6)	44,496 (4.5)
군인연금기금	24,741 (4.0)	25,763 (4.1)	26,923 (3.9)	28,690 (3.9)	29,566 (3.8)	30,660 (3.6)	32,111 (3.6)	33,630 (3.4)
기타 ³⁾	11,256 (7.2)	12,157 (8.1)	13,464 (8.4)	14,262 (8.5)	16,294 (8.6)	16,409 (2.4)	20,098 (9.0)	23,719 (2.4)
합계	620,009 (100.0)	632,583 (100.0)	690,410 (100.0)	738,895 (100.0)	775,672 (100.0)	840,083 (100.0)	899,326 (100.0)	984,171 (100.0)

주 1)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사회복지 분야 기금 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3) 임금채권보장기금, 복권기금, 양성평등증진기금 등 11개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부문별 현황
(2018년 본예산)

공적연금
47.8조 원

노동
23.8조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문은 공적연금(35.7%)이며, 노동, 주택,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순으로 규모가 크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부문은 노인·청소년과 취약계층지원 부문이다.

(단위: 억 원, %)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본예산)
기초생활보장	79,714 (9.4)	86,528 (9.6)	86,757 (8.8)	94,017 (8.8)	102,540 (9.1)	109,372 (9.0)	113,147 (8.5)
취약계층지원	13,015 (1.5)	16,401 (1.8)	17,671 (1.8)	23,567 (2.2)	25,311 (2.3)	26,836 (2.2)	28,268 (2.1)
공적연금	308,520 (36.4)	332,205 (37.0)	357,341 (36.3)	387,826 (36.2)	408,608 (36.8)	440,219 (36.4)	478,007 (35.7)
보육·가족 및 여성	36,438 (4.3)	52,508 (5.8)	57,036 (5.8)	56,425 (5.3)	58,364 (5.2)	59,544 (4.9)	67,348 (5.0)
노인·청소년	40,734 (4.8)	44,683 (5.0)	65,315 (6.6)	88,554 (8.3)	92,348 (8.2)	100,415 (8.3)	112,749 (8.4)
노동	127,474 (15.0)	135,254 (15.1)	143,464 (14.6)	158,543 (14.8)	169,205 (15.1)	178,568 (14.8)	238,104 (17.8)
보훈	40,300 (4.8)	42,794 (4.8)	44,549 (4.5)	46,020 (4.3)	47,868 (4.3)	49,663 (4.1)	55,256 (4.1)
주택	195,726 (23.1)	180,555 (20.1)	205,195 (20.8)	207,833 (19.4)	211,736 (18.8)	237,217 (19.6)	233,870 (17.5)
사회복지일반	5,658 (0.7)	7,054 (0.8)	7,163 (0.7)	7,309 (0.7)	8,186 (0.7)	8,201 (0.7)	11,265 (0.8)
합계	847,549 (100.0)	897,982 (100.0)	984,492 (100.0)	1,070,096 (100.0)	1,124,165 (100.0)	1,210,037 (100.0)	1,338,014 (100.0)

주 1)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 대비 부문별 비중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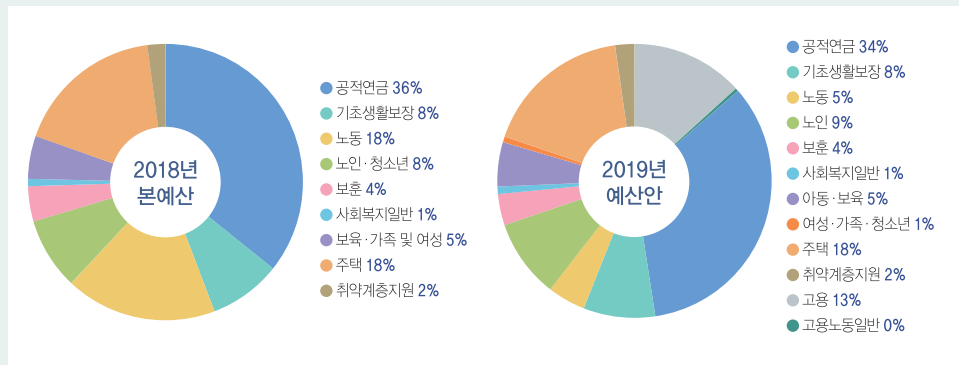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부문 개편

9→12개 부문

사회복지 분야 부문은 2019년부터 9개 부문에서 12개 부문으로 늘어난다. 기존의 보육·가족 및 여성과 노인·청소년 부문이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노동 외에 고용, 고용노동일반 부문이 신설된다.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주요 사업 (2019년 본예산)

기초연금

11.5조 원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6.4조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1.5조 원,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6.4조 원 등 개별 사업의 규모가 크며, 소외계층 지원 확대와 저출산 대응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2019년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

(단위: 억 원)

부문	구분	사업명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업유형
기초생활보장	일반회계	의료급여경상보조	53,453	63,900	국고보조
	일반회계	생계급여	37,198	37,472	
	일반회계	주거급여지원	10,946	16,423	
주택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73,500	78,442	용자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용자)	17,112	15,442	
노인	일반회계	기초연금지급	91,028	114,745	국고보조
아동·보육	일반회계	영유아보육료 지원	32,575	34,053	
	일반회계	아동수당 지급	7,078	19,261	
고용	고용보험기금	고용창출장려금	2,638	8,062	
	일반회계	청년내일채움공제	1,848	5,938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포함한 7개 급여를 지급받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대상·급여별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 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개념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 지급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하는 비용 지급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지급
2019년 주요 변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70% 이하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 무자 기준 적용 제외		주거 지원 대상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

서민의 주거지원

주택 부문의 사업은 주거비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의 주거지원 정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자금 지원, 전월세 비용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 수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9년에 신혼부부 공공임대를 3만 호에서 4.3만 호로 확대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세어하우스 등 청년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¹. 기초연금은 2018년 하반기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며,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대상(150만 명) 월 최대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아동·보육 부문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며 2018년 1월부터 역대 최고 수준(부모 바우처 2.6%, 기본보육료 21.8%)으로 인상되었다. 아동수당은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8년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에 포함된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7년 추경을 통해 도입된 청년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부터 기존 9만 명(2018년 추경)에서 18.8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청년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²은 2019년부터 기존 11만 명(2018년 추경)에서 신규 12만 명이 추가된 23만 명의 신규 취업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일**

¹ 기초연금으로의 개편은 2014년 7월에 이루어졌으며,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2007년부터 9.7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모태로 하고 있다.

² 청년 2년 600만 원 납입 시, 정부(1,800만 원)와 기업(정부지원 750만 원 중 600만 원 청년 목돈마련에 기여)이 보태어, 3년 만근 시, 3,000만 원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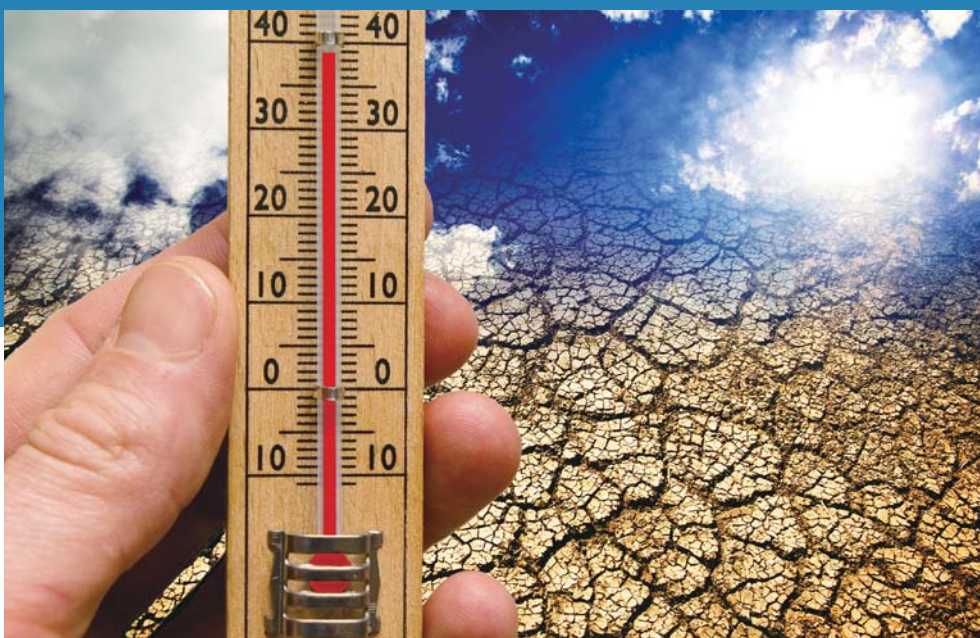
이달의 이슈키워드:

폭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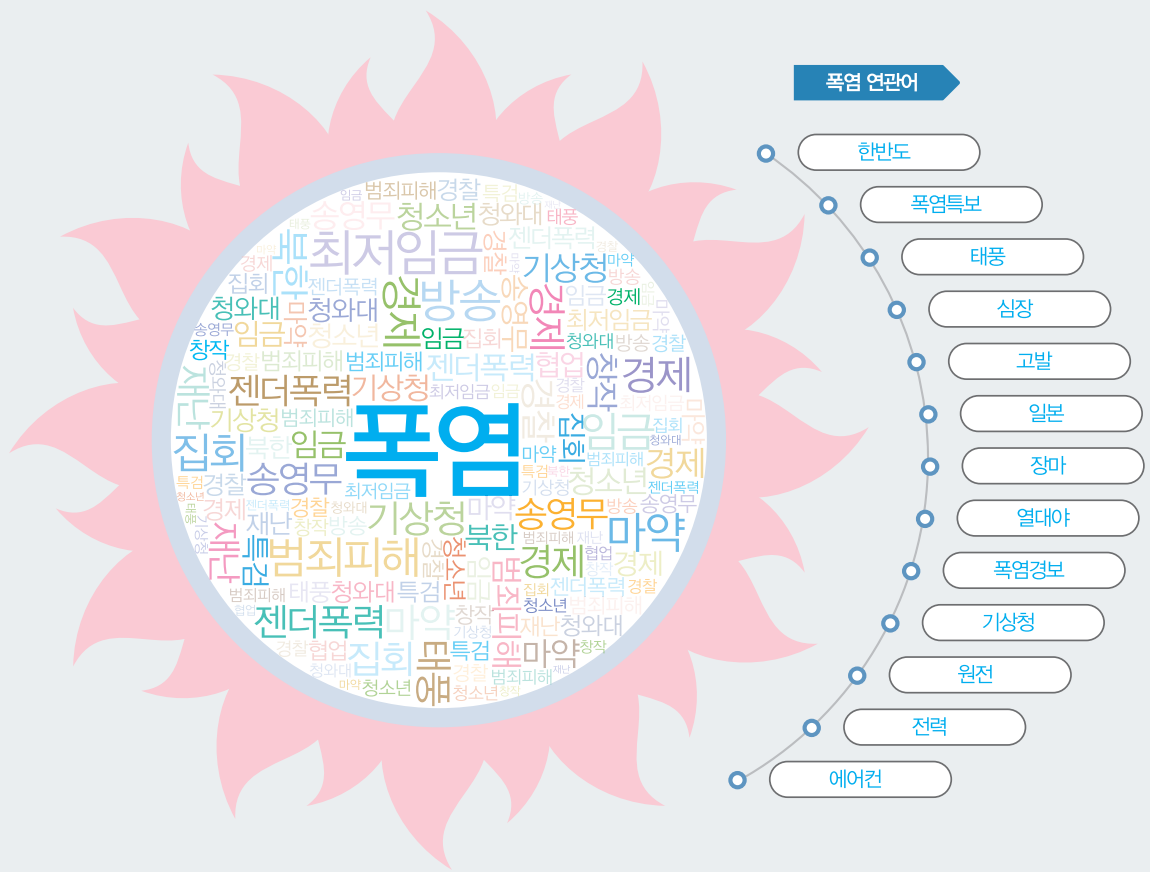
김상기

재정통계분석팀 연구원

sgkim@kpfis.kr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장기간 지속되는 불볕더위로 인해 지난 한 달 동안 '폭염'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수요도 급증하며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국민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주: 호우, 태풍, 대설, 기상재해가 포함되어 검색된 결과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18.8.8.), 수집기간: 2018.7.1.~7.31.

수요관리제도와 전력산업발전기금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수요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요관리제도란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비자의 전기사용 패턴을 평활화하여 소비자의 전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를 통칭하는 것이다. 1973년 석유파동으로 에너지 공급여건이 불안해지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주택용·일반용 요금 누진제를 시행하며 수요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수요관리제도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효율을 향상하거나 비상시 전력의 수급조절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단위: 백만 원)

연도	2001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규모	3,788	19,073	17,934	35,986	37,810

자료: 각 회계연도별 결산보고서 및 2018년 기금운용계획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던 공익적 기능이 정부로 이관되면서 전력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설치되었다. 2018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규모는 설치 당시의 규모 3,788억 원 보

다 10배가량 증가한 3조 7,810억 원이다. 대부분의 수입은 법정부담금으로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조 7,807억 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2018년 예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은 크게 에너지공급체계구축, 전력기술개발, 전력기술기반확충, 에너지안전관리, 전력산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위: 백만 원)

	주요사업	'18년 예산
 에너지 공급체계구축 1,149,42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05,159
	• 신재생에너지보급	572,375
	• 에너지신산업	17,745
	• 전력효율향상	46,035
	• 농어촌전기공급지원	119,809
	• 무연탄발전지원	800
	•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11,497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76,000
전력기술개발 391,087	• 전력공급기술	293,935
	• 전력수요기술	97,152
 전력기술기반확충 122,731	•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3,261
	• 기반구축	75,066
	• 국제협력	23,583
	• 에너지인력양성	20,821
 에너지안전관리 98,849	• 전기안전관리	98,849
	• 전력산업홍보	6,993
	• 전력해외진출지원	8,175
	• 전력산업정책개발	475
	• 원전현장인력양성	3,016
	합 계	1,780,746

자료: 한국전력 전력기반센터(www.etep.or.kr)

에너지공급체계구축사업(1조 1,494억 원)은 안정적인 전원 확보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발전설비로부터 5km 이내 위치한 지역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해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전기차 산업기반 구축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를 무상교체하고 최대전력관리장치(목표 전력에 따라 연동된 에너지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관리하는 지능형 에너지관리장치)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과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력기술개발사업(3,911억 원)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연

구개발(R&D)사업이다.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력공급을 다변화뿐만이 아니라 스마트그리드(전력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인프라 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력의 수요관리를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전력기술기반확충사업(1,227억 원)은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국제 표준화 추진 등 전력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전력기술정보의 교류와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과 제품의 시험·인증을 지원하고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및 산업현장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국제기술협력을 활성화하여 선진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에너지안전관리사업(988억 원)은 취약시기 예방점검 및 전기재해 통계분석 등으로 국가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빙기, 장마철 등 전기재해 취약시기에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기사고의 원인 규명으로 재발방지를 지원한다. 특히 돌발적인 고장·정전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해 24시간 '긴급출동 고충처리(전기안전 119)'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용 전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해 무료로 응급조치를 도와주고 있으며 출동신청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1588-7500)에서 가능하다.

전력산업경쟁력강화사업(187억 원)은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해외 잠재시장 선점을 위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국민과의 소통으로 전력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기 소비·안전 교육으로 에너지 절약과 전기재해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정책을 개발하고 현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으로 전력산업의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력**





재정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주요국의 재정보고서 작성 사례: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¹

김선옥

한국재정정보원 재정통계분석팀 부연구위원
sokim@kpfis.kr

OECD 국가들은 재정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회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재정보고서가 점점 포괄적이고 복잡해지고 있다. 다양한 목적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재정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나, 기술적이고 상세한 재정보고서는 일반 사용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반면 기본 정보만을 담고 있는 재정보고서의 경우 전문가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역설이 있다. 이번 해외재정동향에서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4개국의 예산서와 재정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국가들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떠한 보고서가 언제 생산되고 책임성과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는지, 최근에는 어떠한 개선 노력이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재정보고서의 목적

과거 재정보고서 작성의 목적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보고서 제공이었으나, 요즘에는 재정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

¹ 본 해외재정동향은 OECD 보고서 'Rationalising government fiscal reporting: Lessons learned from Australia, Canada,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on how to better address users' needs' (2018)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해관계자에 따라 요구하는 정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예산과 재무 정보를 담고 있는 재정보고서는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 의무를 다하고, 관련 전문가에게는 정부 재정에 대한 전문적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보고서는 그 목적과 수요 대상에 따라 요구사항과 전문성이 달라져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최근에는 다양한 재정보고서가 작성되고 있고, 국가에 따라서는 독립적인 재정기관(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IFIs)과 의회예산기구(Parliamentary Budget Offices, PBOs) 등을 설치하여 독립적인 보고서를 제공하거나 경제·재정 분석 부분을 강화하여 발표하기도 한다.

다양한 목적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재정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나, 기술적이고 상세한 재정보고서는 일반 사용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반면 기본 정보만을 담고 있는 재정보고서의 경우 전문가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역설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정보 제공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OECD 국가 중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4개국에서 최근 발표하고 있는 재정보고서를 통하여 살펴본다.

4개국의 재정보고서(fiscal reporting)

분석 대상인 4개국은 지난 20여 년간 재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 및 국회의 현대화, 책임성 강화, 공공부문 의사결정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재정보고서가 다양화 되었는데, 여기에서 살펴 볼 재정보고서는 2017년에 수집된 각 국가의 재정보고서이다. 각 국가들은 사전예산서, 예산서, 성과정보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모든 국가에서 예산 절차와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규정하는 광범위한 원칙들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루는 4개국 중 호주와 프랑스는 법률에 따라 재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 포함해야 할 회계 정보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캐나다와 영국은 대부분의 재정보고서가 합의에 기반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

사전예산서(Pre-budget statement)

4개국은 모두 경제 전망, 재정전망과 예산 우선순위를 담은 사전예산서를 발간하는데, 이 예산서는 보통 회계연도 시작 4~6개월 전에 발간된다.

〈표1〉 국가별 사전예산서 현황

	보고서명	발표시점 (회계연도 시작 기준)
호주	회계기간 중 경제재정전망(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6개월 전
캐나다	수정 재정경제전망(Economic and Fiscal Update)	4~6개월 전
프랑스	사전예산보고(Preparatory Budget Report)	6개월 전
영국	가을예산서(Autumn Statement)	4~6개월 전

예산서(Budget statements)

4개국의 예산안에서는 예산의 기반이 되는 거시 경제적 상황과 정부의 재정목표 및 주요 정책결정 사항을 제시하고, 재정수지 및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세입과 세출의 연간 예측, 그리고 지출 상한에 대한 법률규정 등을 담고 있다. 아래 표는 4개국에서 발간하는 예산서 현황으로, 모두 예산서를 발행하지만 프랑스는 예산안이 회계연도 시작 전 한 번 발간되는 반면, 호주, 캐나다, 영국은 예산서와 세출예산서가 분리되어 작성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발표시점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표2〉 국가별 예산서 현황

	예산서 (Budget Statements)	발표시점 (회계연도 시작 기준)	세출예산 (Estimates)	발표시점 (회계연도 시작 기준)
호주	예산서(Budget Papers)	2개월 전	세출예산(Appropriation Bills)	2개월 전
캐나다	연방정부예산(Federal Government Budget)	1~2개월 전	세출예산(Main estimates)	2개월 전
프랑스	예산법(Budget Bill)	3개월 전	—	—
영국	예산법, 재정법(Budget and Finance Bill)	1개월 전(예산법) 회계연도 시작(재정법)	세출예산(Main estimates)	회계연도 시작

그리고 예산안 작성에 있어서 호주, 캐나다, 영국은 행정기반(비목별) 예산을 작성하며, 프랑스는 행정기반 외에도 주요 정책 영역별 예산을 제출한다. 또한 캐나다는 목적에 기반 한 예산 집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회기 중, 회기 말 재정보고서(In-year, Year-end financial reporting)

회기 중 재정보고서로 4개국 모두 재정 총액을 해설서와 함께 월별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호주와 프랑스에서는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정보를 매일 제공한다.

〈표3〉 국가별 회계기간 중 재정보고서 현황

	월별	분기별
호주	호주 일반정부부문 월간 재정동향 (Australian General Government Sector Monthly Financial Statements)	—
캐나다	월간 재정동향(연방정부) (Monthly Fiscal Monitor (federal government))	분기 보고서(부처별) (Quarterly Financial reports (departments))
프랑스	월간 예산 지출 (Monthly Budget Outturn)	—
영국	공공부문 재정게시판 (Public Sector Finances Bulletin)	—

〈표4〉 국가별 회계기간 말 재정보고서 현황

	보고서	발표시점 (회계연도 종료 기준)
호주	최종 예산 지출(Final Budget Outcome)	3개월 이내
캐나다	캐나다 공공계정(Public Accounts of Canada)	6개월 이내
프랑스	예산 집행법(Budget Execution Law)	5개월 이내
영국	연간 보고서 (Annual Reports and Accounts(departments))	7개월 이내
	공공지출통계분석 (Public Expenditure Statistical Analyses)	3개월 이내

그리고 회계기간 말에 각 국가들은 정부 예산 전망과 지출결의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 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6개월 이내에 발행된다.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유일한 국가로,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14개월 이내에 발행한다.

성과 정보(Performance information)

프랑스는 재정정보와 함께 비재무 성과정보가 예산서류에 통합되어 있다. 호주, 캐나다, 영국은 정부기관별로 연중 지출 계획과 관련된 성과정보를 제공한다.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Long-term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4개국 모두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으로 인구학적, 경제적, 공공정책 변화에 대한 경제성장 및 재정목표 등의 내용을 예측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호주의 경우 연중 중기 전망(Annual Medium Term Projections), 세대 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 연금장기비용보고서(Superannuation Defined Benefit Scheme Long Term Cost Report) 등을 발간하고, 영국에서는 격년으로 경제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 및 복지전망보고서(Welfare Trends Report) 등을 발간한다.

이외에 각 국가들은 조세 지출보고서(Tax Expenditure Statement)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독립적인 재정기관(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IFIs)과 의회예산기구(Parliamentary Budget Offices: PBOs)에서 발행되는 재정보고서는 정부 재무 데이터를 이용하여 독립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4개국에서 발표하는 주요 재정정보고서를 정리하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표5〉 ‘4개국의 주요 재정정보고서’와 같다. 4개 국가들은 예산 투명성 측면에서 OECD 모범사례와 권장사항을 채택하고 다양한 재정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재정정보 제공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5〉 4개국의 주요 재정보고서

		예산	결산	
			회계기간 내	회계기간 후
연 간	통합	• 사전예산서 (Pre-budget statement) • 예산안 (Initial budget) • 추가경정예산 (Supplementary budgets) • 채무관리보고서 (Debt management statement) • 조세지출보고서 (Tax expenditure statement)	• 월간보고서 (Monthly report) • 분기보고서 (Quarterly reports)	• 예산집행보고서 (Budget execution report) • 발생주의 재무보고서 (Accrual-basis financial statements) • 재정 통계 (Fiscal statistics)
	부처/ 준정부 기관	• 부처별 예산전망 및 성과계획 (Departments/Ministries budgets forecasts and performance plans)	• 월간 및 분기 보고서 (Monthly or Quarterly reports)	• 재무 및 성과보고서 (Financial and performance reports)
		• 정보 공개 (Open Data)		
다 년 간		• 중기 재정전망 (Medium-term projections) •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 (Fiscal sustainability assessments) • 재정위험보고서 (Fiscal risk statement)	-	-



재정보고서 개선 노력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회계기준 조정, 보고서 제공시점 및 단순화 노력,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 이해도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회계기준에 있어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모두 사용되고 있어 재정보고서를 이해하는데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예산안, 지출한도, 재정보고서 등을 작성하는데 동일한 회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조정하였다. 호주의 경우 국제 기준(IFRS)을 기반으로 한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결산 단계에서만 발생주의를 채택한 프랑스의 경우, 연간 현금주의 재정운영결과와 발생주의 재정상태표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연결한 보고서인 「현금·발생주의 연결 재정보고서」(Bridging Accrual and Cash Financial Report)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고서의 제공시점 관리이다. 다년에 걸친 지출 전망, 연중 재정수입전망, 부처의 지출 관리 등을 위해서는 예산순기에 맞춰 적시에 보고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절차가 명시된 호주, 프랑스는 정해진 기간에 예산 순기에 따라 보고서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캐나다, 영국은 의회와 합의를 통해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단순화를 위한 노력이다. 재정투명성 제고와 회계기준의 조정 요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노력으로 정부는 재정보고서에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수반되었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재정보고서라는 우려가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고자 최근에는 재정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 및 적절한 재정 공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보고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는 지난 몇 년간의 노력으로 보고서 분량의 20%를 축소하였고, 영국은 부처별 결산 보고서를 2015년에 단순화하였다. 단순화 노력과 함께, 재정보고서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호주는 자체 조사 결과 연중 재정보고서 작성에 2,100만 호주달러(약 18억 원)가 든다고 추산하고 비용 감축 노력을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하드카피 형태의 보고서를 제공하고 PDF포맷의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엑셀 등의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자료를 가공하도록 제공하는 추세이다. 다만, 데이터 공개의 포괄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재정정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고서는 간소화 하는 반면, 대용량의 개방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Open data)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온라인으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TBS InfoBase)를 제공하여 부처별 지출 유형별, 프로그램별 데이터 등을 공개하여 재정 관련 전문가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접근성 향상과 함께, 국민과 국회의원들은 기술적이고 복잡한 재정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약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고서 및 해설서를 작성하고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시민과 의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을 단순화한 시민예산(Citizen's Budget), 시민 재무제표(Citizens' Financial Statements)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화 노력과 반대로, 영국은 각 소관별 목적, 목표, 성과달성의 핵심 위험 등 관리 지침(Management Commentaries)를 담은 연중 리포트(Annual Reports and Accounts)를 발간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및 영국 사례를 통하여, 재정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보고서의 개선 노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열**

재정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보고서 개선 노력

- 재정 전망, 예산 및 회계 간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결표 제공
- 통합/총계 기준, 지출유형별, 부처별(프로그램별) 분류 등 재정 데이터를 다각도로 제시
- 보고서의 적시성 확보와 함께 각 순기별로 작성, 포괄적인 감사보고서와 유기적으로 연결
- 정부 위주의 데이터 제공이 아니라, 국민이 재정보고서에서 원하는 정보를 구성할 수 있도록 IT 기술을 제공
- 재무 및 비재무 성과 정보를 담은 간단한 단일 보고서로 작성
- 국민과 의회에 간단하고 접근이 용이한 재정보고서 요약본을 제공
- 복잡하고 기술적인 정부재정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제공
- 전망, 예산 및 성과정보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의 분석 수행
- 보고서 기준에 관한 정부와 의회 간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의사소통 필요
- 재정보고서 작성에 수반되는 비용을 추산하여 비용 감축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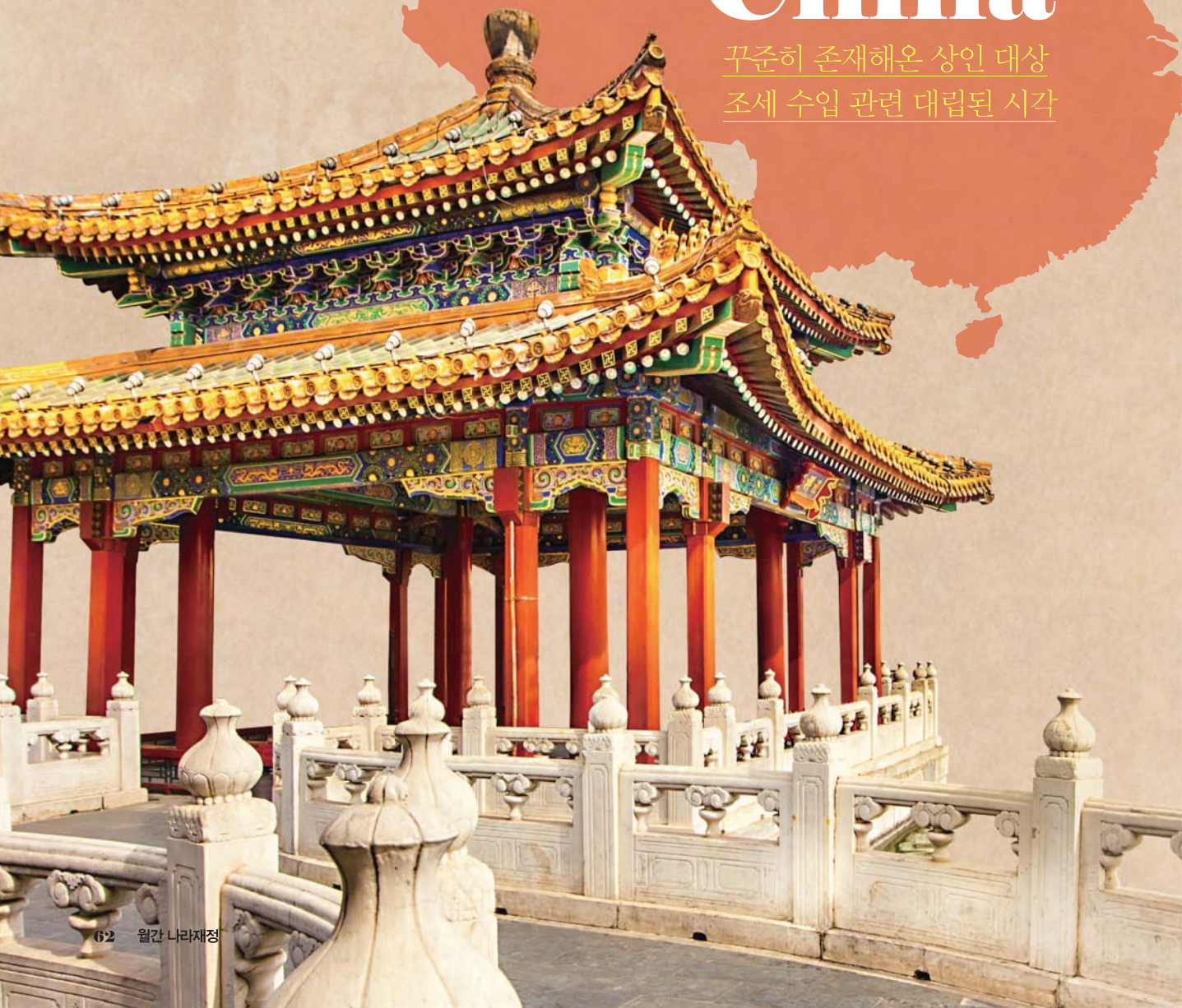
고대 중국의 시장과 국가의 긴장관계

김동욱

kimdw@hankyung.com

China

꾸준히 존재해온 상인 대상
조세 수입 관련 대립된 시각



전통시대 중국에서는 상업 활동과 상인,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조세 수입과 관련해 대립되는 시각이 꾸준히 존재했다. 자본 활동과 부의 축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국사 초기 단계부터 등장했다. 하지만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엄격한 신분구조를 유지하고, 농업 중심적 경제를 관철해야 한다는 시각이 중국사의 전시대를 관통한 주류사상이기도 했다. 일찍부터 발달한 상업과 시장경제와 이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국가 간 긴장관계가 긴장관계를 꾸준히 이어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춘추전국시대 ‘고사성어’의 주인공 관중(管仲 ?~BC645년)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제나라의 명재상이었던 관중은 오늘날 중국 ‘화류계(花柳界)’가 자신들의 시조로 추앙하는 인물이라고 한다. ‘관포지교(管鮑之交)’ 고사 속 주인공이 약간 황당한 대접을 받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열전에 젊어서부터 포숙과 장사를 한 것으로 그려지는 관중은 재상에 오른 뒤에도 상공업 발전을 장려했다. 그는 우선 경제를 담당하는 9개의 부서를 신설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세수입을 늘렸다. 일반적으로 통치자들은 사람이나 건물, 가축 등 눈에 보이는 유형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호한다. 하지만 관중은 달랐다. 관중은 “백성은 주면 좋아하지만, 뺏으면 분노한다. 세금은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며 직접세가 아니라 세금을 상품 값에 포함시키는 간접세 징수방식을 택했다. 조세 문제에 있어선 상층을 부유하게 하는 동시에 하층민을 만족케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름진 농토에 대해선 세금의 10분의3을 면제해 줬고, 아주 메마른 척박한 밭을 경작하는 농부에게도 세금을 공제했다. 그는 상인을 제나라로 끌어들이는 방법도 고민했다. 이를 위해 30리마다 상인을 접대하는 객잔(客棧)을 설치했다. 그런 뒤 그곳에 오는 마차 한 대에는 식사를 제공하고, 두 대가 같이 오면 말의 사료를 대줬다. 세대가 함께 오면 하인의 식사까지 내줬다.

후대의 기록이라 그대로 맹신하긴 어렵지만 명나라 때 사조제가 쓴 「오잡조(五雜俎)」에는 ‘관중이 수도인 임치에 7곳의 술집(女市)을 열고 700명의 기생을 고용했다고 전한다. 청나라 때 기효림의 저서 「열미초당필기(閱微草堂筆記)」에는 관중이 기생수를 2,000명까지 늘렸다고 설명한다. 현대 중국 역사학자들은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매춘을 ‘공창(公娼)’ 개념으로 확대·제도화한 인물로 관중을 평가하기도 한다. 이후 관중은 화류계의 시조로 본의 아니게 모셔지게 됐다고 한다. 관중은 “시장이 서야 생활이 풍요로워진다”면서 백성들에게 잉여 생산물의 판로를 제공해 수입을 늘렸다. 그리고 그는 소비를 장려했다. 근검절약만이 농사가 아니라며 “안 쓰는 것 보다는 차라리 사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상인들이란 이익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기 때문에 소비가 있으면 상인이 움직일 것이란 논리였다.

부유한 사람이 돈을 써야 가난한 사람에게 일자리가 생긴다는 ‘낙수효과(트리클다운 이펙트)’를 주장한 것도 관중이었다. 사람은 창고가 가득 차 물자가 풍족해져야 예절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는 인간관을 가졌던 것이다. 실제 그는 흉년이 들어 빈민이 늘어나자 대규모로 궁전 확장 공사를 실시해 일자리를 늘리기도 했다. 2,700년 전에 이미 케인스식 불황 타개책을 내놔던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관중의 처방은 중국 사상사에서선 비주류 중의 비주류였다. 유학이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는 더욱 그랬다. 상업발전이 농업의 경제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에다 상인들이 사회 지배층의 대항마로 크는 것을 바라지 않았

던 집권층의 의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 시대 이후에는 '남자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여자들은 베를 짜지도 않지만 좋은 옷을 입고 고기만 먹고 산다. 농부들처럼 고생하지 않고도 전답에서 얻은 이익이 모두 그들에게 돌아간다. 그 돈으로 왕이나 귀족들과 교류하며 권세를 이용해 재산을 더 많이 불리고, 좋은 가마를 타고 비싼 신발을 신고서 멀리 놀러 다닌다. ... 존경받아야 할 가치는 무시되고 속물은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거꾸로 된 것이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법을 세우기 위해선 이래선 안 될 것이다'(조작, 「논귀속소(論貴粟疎)」中)와 같은 주장이 공식적으로 힘을 얻었다.

관중식의 실리적 사고가 중국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음은 한나라 때 상홍양(桑弘羊)의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BC110년 한나라 무제는 낙양 상인 집안 출신인 상홍양을 발탁해 국가 재정을 맡겼다. 상인 출신답게 상홍양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이고, 유물론적이며 상공업과 무역을 중시한 인물이었다. 상홍양의 정책 구상은 그의 저서 「염철론(鹽鐵論)」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재정과 외교, 도덕, 철학 등 다방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핵심은 경제적인 내용이었다. 고대 사회에서도 정치의 중심이 경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책의 정책 초점은 국가 재정에 맞춰져 있었다. 때마침 국가의 자금 수요가 폭증했다. 앞서 기원전 140년 무제 즉위 이후 한나라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번영을 구가해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상류층의 사치품 수요가 급증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 이민족과 군사적 대립이 늘면서 국가 재정수요가 급증했다.

국가 재정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농민들에게서 걷는 세금을 늘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농민들에게서 쥐어뜯 수 있는 한도만큼 세금을 쥐어짜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상홍양은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독점하는 '염철전매(鹽鐵專賣)'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국고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세상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는 법. 태행산 동부 지역에서 대형 물난리가 나면서 70여만 명의 농민이 땅을 잃고 떠도는 사태가 발생했다. 상홍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종의 재산세인 '산민전(算緡錢)'을 거뒀다. 산민전은 돈이 많은 상인과 수공업자, 고리대금업자 등에게 자발적으로 자산을 신고하게 해서 2민(緡, 1민은 1,000錢)당 10%, 규모가 작은 상인에겐 5%의 세금을 걷는 식이었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부자세'를 통해 위기에 처한 농민을 구하려는 셈이었다.

자산가들을 겨냥한 정책이 시행되자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상인들은 재산을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정은 자산을 은닉한 사람은 일 년 동안 변방에 보내고, 신고에서 누락된 민전을 모두 몰수하겠다고 엄포를 냈다. 숨겨놓은 자산을 신고한 '세파라치'에게 몰수재산의 반을 주다고 하면서 상인들을 압박했다. 이 같은 정책으로 일부 세수가 느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는 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산가들의 부담이 늘면서, 어렵게 부를 쌓기보다는 돈을 버는 대로 바로바로 써버리는 소비 행태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당대의 관료들은 "황제가 고기음식을 줄이고 비용도 절약해 내정(內廷)에 모아둔 돈을 꺼내 백성들을 구제하고 부세도 관대히 해줬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밭에 나가 농업에 힘쓰지 않는다"며 "상업에 종사하는 자만 더욱 늘고, 가난한 사람은 저축한 것이 없어 오직 조정에만 의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백성들은 소비에 치중해 저축하거나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기」의 사평은 후대에 두고두고 상홍양의 정책에 꼬리표로 따라다녔다. 사마천은 한무제 시대 상인 출신들이 대거 중앙정계에 진출한 것도 못마땅해 했다. 양을 천여 마리나 길렀다는 복식(卜式) 등이 장사로 조성한 막대한 재산으로 관직을 샀다며 직설적인 공격을 한 것이다. 공근(孔僅)과 동곽함양(東郭咸陽)에 대해서는 “염철전매로 부자로 된 사람만 관직에 등용되고 있다”며 “상인만 관료로 들어올 뿐 올바른 인재는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나마 ‘부자세’ 도입으로도 국가의 재정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BC99년 한나라 장군 이릉이 흉노에 사로잡히자, 한무제는 다시 20여만 명의 군사를 투입했다. 상홍양은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했다.

상홍양은 소금과 철에 이어 술을 국가에서 독점키로 했다. 술의 원료를 포함해 생산에서부터 제조, 유통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관리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과도한 세원 확대 정책은 “국가가 생활필수품을 매개로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동중서(董仲舒)를 비롯한 유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당초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 시 고려했던 효과와 달리, 실물경제의 왜곡과 비효율도 계속되면서 상홍양의 처지도 어려워졌다. 이후 한무제 마저 죽어버리자 강력한 바람막이 지지 세력을 잃은 상홍양의 입지는 빠르게 축소됐다. 결국 상홍양은 BC80년 75세의 나이로 모반죄에 몰려 멸족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계획에 따른 증세라도 모든 증세는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중국사의 초기 단계부터 뚜렷하게 드러났다. 증세를 한다고 해서 필요한 액수를 모두 채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도 같이 증명됐다. 징세의 어려움이라는 조세 당국의 어려운 과제가 역사의 첫 장부터 제시된 것이다. **나라**

참고 문헌

- 桑田幸三, (1959), 桑弘羊의 專賣論 - 塩鉄論 の一研究, 經濟論叢, 京都大經濟學會.
- 이화승, (2013), 「상인 이야기-인익과 실리를 좇아 천하를 밟은 중국 상인사」, 행성:B원새.
- 신창호, (2013), 「관자-최고의 국가건설을 위한 현실주의」, 살림.
- 사마천, (1992), 「사기열전」, 홍석보 옮김, 삼성출판사.
- Liang Cai, (2014), Witchcraft and the Rise of the First Confucian Empir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 P F I S N E W S

한국재정정보원 2018년도 신입사원 임용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8월 30일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선발된 일반직 · 운영직 등 30명을 수습사원으로 임용하였다. 이번 채용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실업난 해소'에 부응하고자 신입사원 위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서류심사에서부터 필기시험, 면접까지 전 단계에 거쳐 연령 · 학력 · 학과 · 출신지 등 직무 수행과 무관한 평가항목을 철저하게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여 능력 위주의 편견 없는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찾아가는 dBrain 교육' 실시



한국재정정보원은 디브레인 정기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지방 공무원들을 위해 8월 27일(월)~31일(금) 부산에서 '찾아가는 dBrain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해 제주, 올해 상반기 광주에 이은 이번 세 번째 교육은 부산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영남지역 디브레인 사용자 20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재산, 물품, 조달, 지출, 수입 등 5개 과목에 대해 이루어졌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정기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용자들의 신청을 받아 매년 1~10월 한국재정정보원 내 교육장에서 예산, 수입, 지출, 자산, 물품 등에 관해 교육하고 있으며, 11~12월에는 일선 및 중앙관서 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결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월간

나라 재정

SEPTEMBER
2018 Vol. 21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tis.or.kr
발행인	김재훈(한국재정정보원장)
편집위원장	박용주(재정정보연구본부장)
편집위원	장정진(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 최성진(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사무관) 연훈수(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 심혜인(재정정보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오병욱(경영지원본부 차장) 이현석(dBrain운영본부 차장) 박종필(사이버안전센터 차장) 김철수(e나라도움운영단 차장)
편집간사	김도일(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원)
디자인 · 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02-549-5298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PTEMBER
2018 Vol. 21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9 772508 897000
ISSN 2508-8971